

第240回國會
(臨時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6月17日(火)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국정홍보처)

○鄭東采 委員

<방일외교 ‘비하발언’대응 국정홍보처의 책무이다.>

▷ 국정성과를 왜곡·폄하하려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 국정홍보처의 책무는 바람직한 국정홍보를 위해 참여정부의 성과와 개혁정책들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비하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성과를 창출했다고 해도 일부에서 그것을 폄하하고 왜곡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그 성과는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는 정부를 대표하여 잘못된 홍보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 성과에 대해 야당 의원의 상식을 벗어난 비하발언과 관련 국정홍보처장 명의의 공식 유감표명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처장님!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를 대표하고 국정을 대변하는 홍보책임 부처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성

과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사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서둘러야>

○ 국정홍보처는 지난 3월 이후 정부 각 부처에 개방형 기자실을 도입하고 브리핑 룸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서 우려와 비판을 토로하였지만 ‘개방형 브리핑제’ 운영은 3개월이 지난 현재 외신 기자뿐 아니라 국내 기자들에게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방형 브리핑제’는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기상청 등 단독청사를 가진 5개 부처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청사, 과천청사 등 통합 청사의 ‘개방형 브리핑제’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처장님!

하지만 공간확보 문제로 인하여 제도 도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로서 통합 청사의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李協 委員

<개방형 브리핑제 보완이 시급하다>

○ 참여정부 들어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기자의 사무실 출입 등 각 부처의 언론취재관행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개방형 브리핑제는 지난 4월 문화관광부가 부처 중 첫 테이프를 끊은 후 6월에 청와대 그리고 9월부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도 이를 시행한다.

○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

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본 바로는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해 기존 출입기자들은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취재만 불편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신규 출입기자들은 공무원 접근이 안되니 취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정부나 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보관들의 전문성이 뒤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공보관들의 전문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보 관련 직무교육이나 연수가 턱없이 적다는 사실 또한 부실한 브리핑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부처 공보관의 경우 홍보처가 실시한 엘지애드 직원의 홍보특강과 오보대응을 위한 변호사 특강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맞는지? 사실이 라면 결국 효과적인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대단히 부실했다는 결론인데?

○ 더욱이 공보관이 국장급이지만 사실은 약간 아래라서 다른 국·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보처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보관의 직급 상향을 건의한 것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모든 브리핑을 공보관이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보관 외에 해당 실·국장이 브리핑을 하는 사례도 많은지? 만일 실·국장이 하는 경우도 많다면 이들에 대한 홍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내실 있는 브리핑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 운영은 9월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새 정부출범 직후부터 논의돼 온 것임에도 그동안 총리실과의 조율에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청사 개조작업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설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계획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 처장의 견해는?

○ 끝으로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등의 결과 과거에 폐해가 많다고 비판됐던 기자실이나 취재관행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주요 계기 없어도 적극적 홍보 필요하다.

○ 홍보처는 지난달 말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주요 계기를 통한 홍보중점 추진'을 첫 번째 현안과제로 내세웠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 동계올

림픽 유치 등 국제행사, 대통령 외국방문 등을 계기로 삼아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정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 홍보처 업무보고를 보면 '요즘 많이 궁금하시죠', '함께 생각해봅시다' 등 홍보간행물 외에는 그동안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할 일들이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업무보고나 그동안 홍보처가 해 온 활동내용을 보게되면 "마치 주요 계기가 별로 없어 홍보를 제대로 못했지만 외국 방문 등의 계기가 많을 것 같으니 제대로 홍보하겠다"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것을 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정방향 등에 대한 홍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홍보처는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상당한 정도로 떨어지고 기사실 개편 등으로 인한 불편한 대언론 관계 등 여건상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는 지금에 이르러 적극적인 홍보를 피하고 있는데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둘지 다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참여정부 100일 동안 대구 지하철 참사로부터 시작해 대북송금특검법, 이라크 파병, 한총련 합법화, 부산 화물연대 파업, NEIS 논란, 새만금 간척사업 등 각종 이슈들이 빈발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미국 일본 방문 성과를 두고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각종 이슈들에 대해 홍보처는 정부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여론수렴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6월 현재 총 9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6회(대통령 취임계기, 수도권 대기오염, 대통령 방미계기, 대통령 TV토론, 대통령 방미성과, 국민보훈의식)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대통령 관련을 빼면 과연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처장의 답변 바란다.

참여정부 100일 동안 그 성과는 별론으로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도됐다. 그 가운데 홍보처의 활동으로 정말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다소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홍보처는 기자

실 개편과 ‘오보와의 전쟁’ 그리고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은 결과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부 비판적인 언론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때로는 상당히 과장된 보도나 추측보도 등 허위 또는 왜곡보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홍보처가 적극 시정을 요구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 또한 빼놓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한한 것이겠지만 언론과의 전쟁에서 벗어나 당초 의도했던 대로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방안은 무엇인가?

□ 홍보처는 업무혁신 필요없는 유일한 부처

○ 정부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정부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혁신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현재 48개 기관이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혁신 내용을 홈페이지의 ‘업무혁신방’ 코너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홍보효과 제고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는 각 부처 ‘업무혁신방’을 링크시키고 있는 한편 ‘업무혁신 공유방’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각 부처의 자기혁신을 통한 총체적 정부역량 제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정부의 업무혁신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묻고 싶다. 하나는 홍보처 자체의 혁신에 대한 소극적 자세, 다른 하나는 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는가 하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정부의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겠지만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최소한 타 부처와 같은 정도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업무혁신이라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살펴본 바로는 국정홍보처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타 부처는 5월부터 전담조직을 설치해 활발히 활동하고 또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처는 언제, 어떤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운영성과라 할 수 있는 업무혁신 사례

를 살펴보면 건교부와 환경부의 ‘상호 인사교류’, 교육부의 ‘평생학습 마일리지제 운영’,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화상접견 전면 실시’, 해양수산부의 ‘등대의 관광자원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다.

각 부처 업무혁신방에 소개된 사례를 살펴보니 해양수산부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통일부도 2건인데 비해 홍보처는 업무혁신 사례나 관련제안이 단 한건도 올라 있지 않다. 혁신할 업무가 없기 때문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홍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업무혁신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며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구체적 혁신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홍보처가 참여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기자실 폐지나 브리핑룸 설치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 중요한 국정과제인 업무혁신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또한 업무혁신에 대한 의지가 타 부처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 홍보처는 자체 업무혁신에 소극적이고 따라서 관련 홍보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업무혁신에 대해 그리고 그 성과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적극적인 홍보를 했을까 의문이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 국가이미지 제고 활동에 홍보처도 소극적

○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월드컵성공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각 부처의 관련 활동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월드컵 1주년이 지난 지금 이제까지의 국가이미지 제고 활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실망스럽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지난해 7월 의욕적으로 출발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겨우 두 차례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홍보의 주무부처장이자 위원회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처장에게 묻겠다. 위원회가 회의를 두 차례밖에 열지 않은 것을 보면 활동이 당초 의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해서는 어느 부처보다 앞

장서야 할 홍보처도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처장은 이미지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임 이후 총리에게 위원회 개최를 건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위원회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위원회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나타난 성과가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는 민·관 합동기구이지만 정부주도로 설립되어 부처 간 단순협의체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활동상황으로 미루어 효율적인 기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처장은 이런 구성체인 위원회가 국가이미지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기구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현재로는 위원회가 형식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위원회와는 별개로 홍보처는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沈載權 委員

<홍보처, 한국 관련 오류기술 시정에 노력해야>
본 위원은 지난 6월 10일 25년 전통의 교과서 출판사로 전 미주대륙을 대상으로 World Map, World History Map Exercises, World Globe 등 총 1200 종류 이상의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는 bjup 출판사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자주 수업에 거론되면서도 한국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 교과서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국가”, “역사 내내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었던 나라”, “일본해” 등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국내 네티즌들로 구성된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크의 이번 성과는 올 2월부터 자체 구축한 ‘온라인 교과서 오류시정망’을 통해 미주, 유럽, 아시아권의 300개 교과서 출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개선을 요구하는 친선서한 발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국정홍보처장! 홍보처는 외국의 교과서 내용 개선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민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기관인 국정홍보처가 직접 외국의 교과서 출판사를 대상으로 친선서한을 보내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홍보처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고지도와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국립도서관·국립해군성문서보관소 소장 고지도, 미 의회도서관 소장 고지도 등에서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밝히는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의 주권 찾기 노력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에 앞으로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란 기대도 가능케 합니다.

더구나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고 있는 미 CIA의 ‘월드 팩트북’ 홈페이지에 독도가 리앙쿠르암(독도를 맨 처음 발견한 서양 배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의 가장 높은 지역을 한라산, 가장 낮은 지역을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동해를 일본해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홍보처장! 홍보처장은 미 CIA의 정보오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정보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홍보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範九 委員

<국정모니터 제도가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성과도 없습니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정모니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를 지적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홍보처는 국정모니터 인원을 각 분야별 전문가 300명과 일반인 300명으로 교체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모니터 인원을 확정짓지도 않았고 결과물도 전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참여정부’를 맞아 국정모니터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가 정책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모니터 제도를 전환하고 안착시키는 데 전혀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업무방기가 아닙니까? 아니면 지난해처럼 또다시 국정모니터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특히 ‘참여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국정모니터 제도가 긴요하게 활

용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미일 방문 등 외교정책, 경제위기 및 부동산 대책, 대북정책, 불안정한 국정 시스템운용 등으로 인해 큰 국정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 유독 정부에서만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국정운영과 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벌써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국정홍보처장은 국정운영과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정모니터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국정모니터제도 관련(요구자료)

국정모니터 운영 현황(주요업무현황 자료 중)

○李允盛 委員

<임시직 편법 고용 관련>

□ 현황 및 질의

○ 지난 5월 26일 공개된 감사원의 예산집행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편법 인력동원 및 위법적 예산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관련 특히 국정홍보처의 경우는 공무원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인 국정홍보프로그램 제작요원을 상용근로자로 편법 고용, 이들의 급료로 지급한 23억 원은 관서운영비 등 다른 명목의 예산에서 전용한 바 있음.

이에 감사원은 “편법 고용된 이들에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국가부담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예산을 편법 전용했다면 현재 이들의 인원 감축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임.

▷ 현재 홍보처가 수립한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

▪ KTV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의사는 없는가?

※ KTV 시청률: 2000년도 평균 - 0.09%

2001년도 - 0.088%

2002년도 0.06%로 꾸준히 하락

- 인터넷 부문을 강화하여 인터넷 전문방송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인터넷상 실시간 방송을 강화하면 굳이 별도의 채널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시청률 저하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이 없는가?

○金秉浩 委員

<외국교과서 한국왜곡 실태 개선 시급>

지난 6월 9일 정신문화연구원이 세계 14개국 중·고 교과서 43종의 한국 관련 왜곡사실을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호주의 고교생용 사회교과서에는 “한국은 35년간의 일본점령기에 경제발전을 이뤘다”로 표현하고 있고 미국 등 9개국 14개 교과서가 한결같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베트남의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 “민족산업이 발전해 자동차 기관차 기차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평양에는 30~40층에 이르는 고층빌딩이 건설돼 있다”고 기술한 반면 한국은 “후진공업국으로 출발해 현재 녹음기 카세트 계산기와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로 나와있다고 한다.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상 한국 관련 오류시정작업을 강화하고 외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시정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금년도 예산 중 대외홍보로 7억 467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산안 사업개요와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 관련 시정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과서 관련 오류시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해당 국가의 경우 현지어로 된 시정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배포하여 시정하고 해당 국가 교과서 관련 단체 및 출판사와의 접촉을 통한 활발한 수정,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개방형 브리핑제도, 내실화 교육이 필요하다.>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브리핑제 활성화를 위해 특강을 요청한 문화관광부 등 17개 부처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담당할 공보관에게 6월 말에서 7월 초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숙명여대 언론정보대학원

의 조정열 교수가 정부중앙부처 공보관 12명과 지방자치단체 홍보책임자 12명 등 모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홍보담당자로 임용되기 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는 29.2%인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7명(70.8%)은 관련 업무에 종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 특강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어떤 직무교육이나 연수 등의 기회도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공보관이 실질적인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임.

모든 실·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기자들의 질의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할 것이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만 브리핑제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봄.

단순히 브리핑 기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은 지난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의 경질 케이스가 입증해 주고 있음.

각 부처의 공보관은 부처의 얼굴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북한에 가관신문을 보낸다?>

현 정부는 언론과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기관 내의 가관구독을 금지시킨 바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중 가관을 구매하는 정부기관이 있음.

통일부는 지난 정부 때부터 가관을 구매하여 매일 오전 8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제공하고 있다고 함.

통일부가 국내언론의 가관내용을 북측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가관 구독을 금지시키면서 북한 측에 가관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화관광부)

<“언론과의 긴장관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전후하여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하고 있으며 외교정책, 교육정책 등 중요 정책에서 애매모호성 정책으로 인해 국정이 오락가락하고 있음.

그렇지만 현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질타하는 언론이나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적 감정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언론 탓으로만 돌리고 있음.

언론보도 하나 하나에 얼굴을 붉혀서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치라는 게임에서 언론은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설사 심판의 판정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게임 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는 없음.

현 정부의 대언론관은 대통령의 언급에 그치지 않고 언론 주무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의 몇 가지 발언에서도 언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음.

지난 5월 24일 이창동 장관은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발언을 신문이 1면 톱으로 취급한 것을 두고 언론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또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별것 아닌 것을 갈등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언론이 왜곡이 아니라 하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국민일보 인터뷰 6월 6일)

한편 문화상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해도 되나 기본적인 예우는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 초반부터 대통령을 짓밟나.”

‘정부와 언론은 긴장 관계’라는 현 정권의 대언론관은 옳은 방향임.

민주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은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속성상 긴장과 갈등이 없을 수 없음. 그러나 결코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됨.

참여정부라고 해서 실수하는 일, 잘못하는 일이 없을 수 없음. 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인데도 미루고 있거나 태만에 져어 있을 수도 있음. 일부 언론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섭섭해 할 수도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임무는 바로 그런 것임.

그렇다고 정부와 언론이 상대를 ‘박해’ 할 수 있는 권력의 자원은 비교가 되지 않음.

언론의 기본적 성격은 영향력임. 이는 오로지 독자, 시청자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에 의해 발휘될 뿐임. 언론 보도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정

부가 발휘하는 권한처럼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도 아님. 그리고 사적 소유권이 세습된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님.

뉴욕타임스의 기자로서 여러 대에 걸쳐 백악관을 취재했고 나중에 주필을 역임한 제임스 레스턴은 대통령이 언론을 다루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최선의 방법은 언론에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언론을 바쁘게 만들고 마침내 그들을 지지하게 해 진력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언론의 후각을 자극해 미궁을 헤매게 하는 흥분이나 맛보게 하는 것이다. 최악의 방법은 리처드 닉슨처럼 언론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위의 지적은 정부가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설정에는 필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공동배달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창동 장관이 5월 27일 취임 3개월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너 신문이나 지방신문의 육성 차원에서 현재 3000억 원 가량 조성돼 있는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신문사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 오해를 받더라도 신문 공동배달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특정언론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고 결국 언론의 고유기능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마비와 정부에 우호적인 관제언론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음.

이러한 비판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대통령과 장관의 대언론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외국의 공동배달제와 달리 정부의 공동배달제는 실제로는 공동판매제도라 할 수 있음.

현재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 후 그 성과가 있다면 기업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동원해서 지원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신문시장의 질서는 언론과 독자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유지되는 것이지만 정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부가 공동배달제를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의 양성화 필요성>

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함.

현행 음비개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외화 낭비 연간 5000억 원

노래연습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제 탄산음료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전량 외국산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가장용으로 업소입구에 비치 또는 20% 정도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음.

세수감소(무자료 주류 거래)

현재 노래연습장 업소에서는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구입마저 금지하고 있음. 1일 1개업소 캔맥주 2 박스 정도는 슈퍼마켓 또는 대리점에서 무자료에 의한 구입을 하고 있어 주류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무자료 캔맥주 구입이 보편화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임. 노래연습장에 캔 맥주 판매 허용 시 이는 특별소비세 납부의 대상이 되므로 연간 세수증대는 막대할 것임.

전과자양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시 형사 입건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를 겸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세청에서는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통상 30만 원~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불응 시 고발대상이 되고 있음(표2 참조).

사업주와 고객(국민)의 고통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함으로 손님에게 주류판매 시 단속반에 적발될까 두려움 속에서 영업하게 되고 적발 시 손님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 주류반입 목인의 경우도 처벌대상으로서 손님의 소지품도 감시대상이 되고 목인 시 과징금 50만 원의 처분대상임.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성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사업 행태를 양성화시켜 서민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표 1) 외국의 노래연습장 경영 사례

국가	영업형태	집내서비스 형태	이용계층	출입제한	영업시간 제한	음식물, 주류제공 (반입)	반주기기 형태
일본	가라오케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화 · 노래 · 주류, 음식물 제공 · 일회용카메라 판매 · 투명유리칸막이 및 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층 · 청소년층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중고생) 할인혜택 · 출입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로 조례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맥주, 각테일 및 주류 제공 	LD, 통신(무선)반주기기로 음악제공 첨단가라오케 개발
미국	레이저디스크 반주형 노래방 한국노래방 형태 유행 가라오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화 · 대형화 · CD녹화제공(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층 · 청소년층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음식물 자유자재 취식 	LDP 방식 선호
영국	팝식 단란주점형태 노래방 가라오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화 · 노래 · 주류, 음식물 제공 · CD녹음녹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층 · 청소년층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음식물 자유자재 취식 	CMP 방식 선호
프랑스	단란주점형태 가라오케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화 · 노래 · 주류, 음식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층 · 청소년층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음식물 제공 	CMP 방식
중국	한국의 노래방형태 유입 가라오케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화 · 노래 · 주류제공 · 밀실방을 칸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층 · 청소년층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음식물 제공 	CMP 방식
호주	한국의 노래방형태 유입 가라오케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화 · 노래 · 주류제공 · 투명유리방을 칸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층 · 청소년층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음식물 제공 	CMP 방식
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한국의 노래방형태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화 · 노래 · 주류제공 · 투명유리방을 칸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층 · 청소년층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음식물 자유자재 취식 	CMP 방식

(표 2) 위반업소 처분 현황

(2001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등록현황	위반업소조치현황				
		형사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포함)	경고	계
서울시	5,955	82	39	1,865	853	2,839
부산시	2,583	74	12	710	332	1,128
대구시	1,886	29	53	1,449	405	1,936
인천시	1,597	29	0	323	121	473
광주시	1,106	3	7	327	179	516
대전시	988	0	0	204	18	222
울산시	1,047	0	10	330	58	398
경기도	5,807	4	29	1,895	989	2,917
강원도	1,098	5	1	140	37	183
충청북도	918	20	0	61	196	277
충청남도	1,287	12	12	425	153	602
전라북도	1,274	2	5	338	196	541
전라남도	1,396	5	13	317	133	468
경상북도	2,108	0	28	783	362	11,173
경상남도	2,208	5	15	766	344	1,130
제주도	297	0	0	11	19	30
계	31,555	270	224	9,944	4,395	14,833

※ 1일 전국 300여건씩 형사입건되고 있음(추정)

자료출처: 문화관광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2002년 한국방문의 해'를 무색케 할 정도로 관광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음.

한국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함. 관광이 국내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면 그만큼 대우가 뒤따라야 하며 관광정책 유지와 변화의 기초 또한 상황적 요소에 관계없이 일관되

게 근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함.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관광산업을 2008년까지 8%인 61조 원 수준으로 육성해 외래객 1000만 명을 유치하는 아시아관광허브로 부상하겠다고 보고 했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래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관광장애요인이 해소되어야 함.

이 중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994년 제주도 라곤다카지노 설립 이후 허가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이 일정 수(30만 명) 이상 증가할 경우 2개 이하의 사업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동법에 따르면 1981년 카지노업체를 허가할 때 관광객 수는 44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150여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당연히 추가로 허가되었어야 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카지노 사업이 사행 사업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억제하고 있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정부는 전국에 있는 13개 카지노업체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유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함.(6월 12일 이창동 장관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제주에는 8개의 카지노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업체 간의 과당 경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 간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며 신규허가 대신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최근 문광부는 외국인이 5억 달러 이상의 관광 투자를 할 경우 제주와 경제특구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이러한 방침이 실현성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李允盛 委員

<문화재 위원 선임 관련>

□ 현 황

○ 지난 4월 2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련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다양한 계

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하에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위원 수를 조정한 바 있음.

※ 7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증설 문화재위원은 59명에서 86명으로 상향조정

(비상근 명예직 24명 재위촉, 62명 신규위촉)

◇ 문화재위원회의 분장사항 및 위원 수(총 86명)>

○ 건조물문화재분과(11)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민속자료 중 가옥 등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재분과(13):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에 관한 사항

○ 사적분과(12):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무형문화재분과(16)

무형문화재, 민속자료(가옥 제외)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분과(12):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제외)에 관한 사항

○ 매장문화재분과(11):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 문화재제도분과(16)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 박물관분과(11):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 위촉기간 2003.4.26~2005.4.25(2년)

○ 특히 신규로 위촉된 위원 중에는 (강내회)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박물관 분과위원), (강찬석)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건조물·제도분과 전문위원) 등이 있어 시민운동관계자들을 사상 처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위원 선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일각에선 이번 개편을 두고 문화재 행정의 파행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 문광부의 인선지침(출신배경 관련)을 문화재청이 따라 감으로써 비판적인 단체의 입막음용이라거나 몰갈이용이었다는 시각

○ 문화재 정책과 관리실태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의 제도권 참여로 문화재위원회 자체가 논쟁 무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비판적 시각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입장 확인

▷ 이번 문화재위원의 선임의 기본원칙 확인

▷ 선임위원들의 장차 활용방안 확인

<제주지역 문화유산 관련>

□ 현 황

1.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 지난 5월 14~15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제주도 자연유산지구를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시행한 바 있음.

◇ 유네스코 방문단 제주도 답사현황

○ 참석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자연유산 책임자 나타라잔 이쉬와란 용암동굴 전문가 그레고리 미들턴 외 3명

○ 답사기간: 2003.5.14~15

○ 답사장소

- 5월 14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송악산 화산 지대, 대포 주상절리
- 5월 15일: 뱀뒤굴, 만장굴, 당처물동굴, 성산 일출봉, 비자림

○ 답사결과

외국과 비교검토, 포함지역 선정, 보호법과 관리계획, 토지소유자와 분쟁해결 등

※ 제주도 자연유산지구는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등재후보군인 ‘잠정목록’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로 2002년 3월 문화재위원회에 의하여 세계자연유산 등록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문화유산 7건을 제외하곤) 자연유산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지난 유네스코 관계자들의 답사는 문화유산의 보존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 지난 유네스코 방문단의 답사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요구

-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등록상 문제 여부확인
- 향후 한국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계획 확인

▷ 국회나 시민단체 측에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할 것은 없는지 확인

◇ 2003년 5월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록현황

- 총 등록건수: 730건(125개국)
- 문화유산 563, 자연유산 144, 복합유산 23
- 세계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3종류로 구성.
- 우리나라의 경우

- 종묘,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이상 3건 95년 등록)

- 창덕궁, 수원화성(이상 2건, 97년 등록)

-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장화 고인돌유적

(이상 2건, 2000년 등록) 등 모두 7건의 문화유산이 등록되어 있음.

※ 자연유산은 아직 없는 실정임.

<해외소재 문화재 관련>

□ 현 황

○ 지난 이라크전 당시 국제문화재 범죄조직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 유물 중 일부가 벌써 세계예술품시장에 나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 이에 인터폴은 국제 예술품 거래상, 큐레이터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라크전쟁 당시 도난당한 이라크 고미술품 회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소재의 약탈문화재를 회수하자는 ‘문화재환수국’신설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민간차원에서 ‘문화재 반환운동 범충북 제천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해외문화재 반환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2003년 5월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파악한 해외소재 문화재

○ 20개국 7만 5266점

○ 이 중 정확한 유출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소장국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 정부차원의 협상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소송으로 반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92년도부터 해외 유출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해외 유출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2002~2011)’을 수립한 바 있음.

<해외 유출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

○ 일차적으로 해외박물관 중 한국실 설치 박물관 중심으로 현지조사 (2002~2011년 10개년 연차사업)

○ 영국 대영박물관 등 12개국, 주요 36개처 기관과 현지조사 실시(3만 5567점 등)

◇ 제 안

○ 문화재청의 해외유출문화재 조사시 유출경위 등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출경위 조사팀 구성확인 후 다양한 인재풀(정보력 있는 기관 및 인물구성)로 재구성할 필요는 없는지 확인.

○ 현재 계획으로는 단순한 조사실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만 효과적일 뿐 해외소재 약탈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재청이 지향하는 적극적인 환수방침은?

▷ 소장국 반환의사가 없으면 정부차원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소송으로도 반환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필요, 문화재청의 입장확인.

<북한 문화유적 훼손 관련>

□ 현 황

○ 지난 5월 22일 북한문화재의 보존지원 여부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기도박물관 주최로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라는 학술세미나가 열린 바 있음.

○ 당시 문화재청 측은 개성지역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관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개성지역의 문화유적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였음.

◇ 발표요지

○ 개성 지역의 유물과 유적은 행정구역상 개성시와 개풍군 일대에 집중분포.

○ 현재까지 유적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남북 접경지대라는 조건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이에 대한 보존·복원 및 관리체계가 우선되어야 함.

※ 개성시 문화유적 현황 총 184건

(릉 31, 기타분묘 20, 성곽 19, 봉수지 1, 궁지 8, 사지 55, 탑·부도·불상 4, 정각 8, 비 2, 서원·향교 3, 요지 1, 기타유적 32)

○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재청은 그동안 개성지역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남북합동문화재 조사를 통한 남북문화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공단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협의회에 참여 했음.

○ 또한 관계기관에 문화재조사 관련 안전을 남북장관급 회담의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음.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입장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유네스코는 2002년 고분벽화의 안정

화 및 장기적 보존, 고분벽화 보존 훈련 워크숍, 정기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 전문가의 기술 향상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계획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음.

▷ 그동안 개성공단협의회에 참여한 활동내용 확인

▷ 북한뿐만이 아닌 북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에서 국내에서처럼 문화재가 개발의 뒷전으로 처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보고서

○ 최근(5월 말) 북한 고구려벽화고분의 보존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음.

○ 특히 개성공단조성사업과 관련 이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문화유물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보고서

□ 개 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소속 중국인 학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6월 30일~7월 5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1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이 총회가 관례적으로 보고서의 견해를 따라 왔다는 점에서 고구려벽화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태임.

□ 게재 내용

고분이 침수돼 벽화가 심하게 손상됐고 조명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으며 모니터링 방법과 관리자 훈련이 미숙해 전반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 북한 문화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문화재 보존장기계획사업”을 문화재청은 공개를 불편해 하고 있었음.

▷ 현장에서 청장의 답변요구 공개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구

▷ 공개가능한 계획 및 문화재청의 의지 등은 현장에서 표명해 줄 것을 요구

<전적문화재 DB사업 관련>

◇ 현 황

○ 현재 문화재청은 2011년까지 전적 문화재의 훼손 및 멸실 등에 대비하여 총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전산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3년 5월 현재 전적문화재 DB사업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02~2011년(10개년 연차사업)
- 총사업비: 50억 원
- 사업내용: 중요전적문화재에 대한 디지털 촬영 및 컴퓨터 이미지 구축 등

○ 2002년 사업추진 성과

- 2002년도 기록화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고 (2002년 6월 12일)
- 국보 제291호 ‘통감속편’ 등 30건 촬영완료 및 이미지가공(2002.8.21 ~ 12.20)

○ 2003년 사업개요

- 대상문화재: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국보 및 보물) 50건 이상
- 내용: 디지털촬영 및 컴퓨터 이미지 구축, D/B화 등
- 소요예산: 30억 원
- 사업기간: 2003년 5~12월

○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차 연도 사업 결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국보 22건과 보물 8건을 CD롬 205개에 담아 2003년 올해부터 개인 소장품 위주로 50건을 전산화할 예정이었음.

(2003년의 경우 전적 대상: 국보 19, 보물 9)

그러나 개인소장자는 물론 사립박물관과 일반 기관까지 정보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 현재 국보급 전적류(총 429건)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전적류 56건 중 36건(64%)이 그리고 보물 373건 중 250건(67%)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음. 이 중 실제로 2002년 전산 기록화한 30건은 서울대 규장각 등 국립기관과 대학도서관의 소장 유물이 대부분이며 개인 소장가로는 한 명뿐임.

○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개인이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유재산이지만 민족의 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가 수십 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연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국고낭비이자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계획 당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확인요.

▷ 현재 개인소장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방안요.

▷ 향후 계획 확인요.

<서해 비안도 해저유물 관련>

□ 현 황

○ 지난 4월 22일 문화재청은 고려청자를 무더기로 출토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서해 비안도 해저에 대한 제4차 수중발굴조사를 지난 5월 14일 까지 실시한 바 있음.

- ※ 제4차 조사는 3차에 이어 유물과 선체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팀이 실시한 것으로 3차 조사에서 인양된 상감청자가 1, 2차 조사지역에서 인양된 유물과 연대 및 성격이 다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음.

○ 현재 비안도 해저유물 발굴작업은 지난 2002년 4월 매장유물 신고 이후로 4차 수중조사 까지 실시하였고 모두 3172점의 유물을 발굴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 ※ 2003년 5월 현재 총 3172점 발굴 (신고유물 243, 긴급탐사 211, 1차 1932, 2차 533, 3차100, 4차 153점)

□ 유물발견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금까지 청자 3000여 점이 발굴된 비안도 인근으로 이 지역에 대규모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재 발굴을 위한 광역적인 지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조경만 목포대 박물관장

새만금방조제 공사 지역은 과거 서해의 주요 해로로 국가 세수 수단이었던 조운선 항로로 추정돼 해저 유물이 다량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새만금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91.11.13)를 받아 추진하고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화(99.7.1)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적법한 사업이라는 것

□ 질 의(문제제기)

▷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문화유물 보존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표조사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임.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확인요.

▷ 현재까지 진행한 비안도 해저유물 발굴작업

의 진행경과, 성과 및 향후 계획확인요.

○ 현재 새만금사업 지속여부에 대해 환경과 경제적 시각으로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

▷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창구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청장의 의중 확인요.

<문화재 훼손 관련>

□ 현황

1. 경북 의성 관덕동 3층석탑

○ 지난 4월 26일 통일신라시대 건축물인 경북 의성군 관덕동 삼층석탑(1963.1.21 보물 제188호 지정)이 훼손되어 문화재청과 경찰 등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 당시 문화재청은 관덕동 삼층석탑의 석재 일부가 땅바닥에 팽개쳐지고 1층 옥개부가 3분의 1가량 밀려나 있는 것을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해 관할기관에 신고해 왔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훼손신고 접수 후 우선 공사 실시예 앞서 석조관계전문가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관계자를 긴급히 현장에 파견 지난 4월 28일 현장조사를 실시 후 복구 완료한 상태임.

※ 현장조사 당시 탈락된 석재를 수습하여 일차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탈락된 부위에 대한 접착 등 보존처리를 실시하였고(5월6~7일), 문화재수리전문업체를 통해 원상복구 완료하였음.(5월 12일)

▷ 삼층석탑 훼손과 관련하여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 훼손원인에 대한 구체적 조사결과? (도굴꾼들에 의한 훼손 가능성 등)

2. 경북 군위 인각사 극락전

○ 한편 경북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조선 숙종 사적지 제374호) 극락전 내에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활주(보조기둥)가 한쪽으로 쏠리고 마루가 내려앉는 등 건물이 뒤틀리는 상태가 나타나면서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사정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군위군 측은 해체보수가 시급하다는 입장만 인각사에 전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않은 상태임.

○ 문화재청 또한 “극락전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보수할 것”이라는 공문만 인각사 측에 보낸 바 있고 본 위원들의 답변자료를 통해 별도의 안전도 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및 보존이 시급한 실정임.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각사 경내에는 조선시대의 건물 3동(극락전, 강설루, 명부전)과 주요 문화재로 일연의 사리탑과 그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인각사복각국사탑과 비(보물 428)와 군위인각사석불좌상(유형 339)등이 있음.

▷ 이러한 문화유적의 보물창고에 대해 문화재청과 해당 지자체가 느장인 이유는? 조속한 수리복원이 있어야 하는 것임. 청장의 처리방침 확인요.

○李允盛 委員

<로또 수익금 문예기금 조성관련>

□ 현황 및 질의

○ 문예진흥기금이 모금제도 폐지(2004. 1. 1.) 및 시중 금리하락 등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4800억 원으로는 각종 예술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광부는 사업비 부족분(200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217억 원 부족 예상)을 국가가 지원(향후 5년간 2500억 원 지원, 2010년까지 1조 5000억 조성)하거나

‘통합복권법’상 로또복권을 기타 공익목적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범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익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 재원확보 추진 경과

○ 대통령 업무보고(2003.4.8.) 및 국고예산 요구
▪ 2004년 사업비 부족액 217억 원 국고반영 기획예산처 요구(2003.5.)

○ 경륜·경정법 개정 추진 (현경대 의원 발의 법안, 2003.4.)

▪ 문광부 입장: 개정에 반대치 않으며 통합복권법 제정과 연계 검토

▪ 상임위 공청회: 통합복권법 제정 추이에 따라 추후 논의

○ 통합복권법 제정 시 로또 수익금 배분참여
▪ 로또 수익금 사용용도에 ‘문화예술진흥’명시 추진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로또수익금 배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추진 중

○ 5월 현재 로또복권의 총 수익금은 당첨금과 제발행비용을 제외하고 4181억 원(4월 현재 판매액 총 1조 3020억 원)이며

행자부·건교부·보건복지부·문광부·과기부·노동부·제주도·중소기업청·국가보훈처·

산림청 등 10개 복권발행기관이 배당받아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2002년 12월부터)

○ 문광부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부터 참여하였기에 4월분까지 배분금으로 통보받은 금액은 501억 원이며 현재까지 수익금 이체를 위해 행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체받지 못한 상태임.

2003년1~4월분 로또복권 수익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수익금 배분액	50,125	2,003	19,112	15,514	13,496

▷ 문광부는 4월 업무보고를 통해 타 기금 등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 2004년 사업비 부족액 217억 원 국고반영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한 것이어서 정책을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문예진흥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근본적 방향이 관계부처 내 갈등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주 프로젝트 유치 관련(관광공사)>

□ 현황 및 질의

○ 최근 관광공사는 산자부·문광부·건교부·제주도 등과 함께 ‘중문단지 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 4개 호텔과 유람선에 5개 카지노를 허가하고 △ 사업기간으로 50년을 보장하는 한편 △ 25년간 신규허가를 불허한다는 등의 사업체 요구 계약조건을 논의한 바 있음.

◇ 주요 추진경위

2002.11.15 입주신청 공고

2002.12.3 입주신청(SCI → 한국관광공사, 전체

투자액 규모 약 28억 6000만 불)

2003.2.18 입주적격자 지정 통보 및 계약서(안) 송부

2003.3.10 공사 사장 투자자 현지 면담(라스베가스)

2003.3.26 SCI측 계약서 수정(안) 제출

2003.5.2~3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산자부, 문광부, 건교부, 제주도, 서귀포시, 공사)

2003.5.15 공사측 계약서 수정(안) 제출

※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토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미화 5억 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조건부 허가제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국 투자개발업체인 스타크 컴퍼니 인터내셔널(SCI)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30만 평에 2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조 3600억 원)를 투입하여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18만 평과 대포동 해안가 일대 12만 평 등 30만 평에 호텔 4개 등을 4단계에 걸쳐 개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음.

▷ 그렇다면 SCI사와 체결할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직 미공개)

▷ 일부 공개된 SCI사가 주장하는 용적률 500%, 높이 153m, 해안에서의 이격거리 30m 보장, 주차시설 자유건설 등의 계약조건에 대해 기존 입주업체와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관광공사가 제시한 중문단지 규제사항

용적률 60%, 높이 35m, 이격거리 100-300m이며 특히 중문단지 용적률 법적 한계선은 유원지 면적의 200%임.

▷ 또한 SCI사에선 단지개발과 관련 약 85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모든 기반시설(오수,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의 경우 관광공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광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투자 조건부인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서 향후 문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이에 따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조건 이전에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제주도 시민단체는 수익성보다 카지노 유치로 인한 폐해 등의 문제로 카지노 허가에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시 또한 행정

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외자유치가 실현된다는 점과 관광 제주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나 시기와 방법론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인구가 55만여 명에 불과하고 올해 국내·외관광객 유치목표 480만 명의 제주도에 과연 외국의 투자자가 28억 달러 투자시 경제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한 사업투자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사립박물관 활성화 관련>

□ 현황 및 질의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사립박물관의 90% 이상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였고 자체 폐관 또한 속출하는 사례(폐관신고 없이 자체 개·폐관)가 빈번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사립박물관 정책이 사립박물관 씨말리기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실제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무하여 부처 간 이견과 인식부족 탓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음.

○ 그러나 최근 문광부가 2003년 신규사업으로 지자체보조의 지원방식을 빌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사립박물관의 운영비를 지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워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2011년도 500관을 달성 목표로 하여 문화기반 시설로의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문광부의 취지와는 달리 기획예산처는 개인 소유의 시설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고 지원 성격에 맞지 않으며 지원할 경우 지원 범위 및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

▷ 문광부가 마련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규정과 지자체와의 협의상태는? 기획예산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문광부 입장은?

○ 국민들의 문화향수접근권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문화향수권에 비중을 높이 두는 것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함.

▷ 문광부도 이와 같은 접근을 하여 분석을 해본 바 있는지 확인(그 결과는 무엇인지 확인)

▷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임.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기획예산처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한 일본의 예

○ 일본의 경우 사립박물관에 대하여 건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

○ 차후 설립자가 사망 또는 다른 이유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지자체에 다시 기증하여 지속적으로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져 있음.

▷ 일본의 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검토해 우리와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문광부의 견해는?

◇ 사립박물관 운영보조(신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문광부안): 2003~계속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중 순수 개인이 운영하는 곳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근거 및 방식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003년 지원예산 24억 원(80관 ×3000만 원)

○ 2003년 5월 현재 문광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박물관: 205관(공 35, 사 113, 대학 37)

· 미술관: 63관(공 8, 사 54, 대학 1)

<국립공주박물관 유물도난 관련(중앙박물관)>

□ 현황 및 질의

○ 지난 5월 15일 공주박물관에서는 문화재 4점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5월 30일 도난유물이 회수 사건이 종결되었음.

※ 도난당한 유물로는 국보 247호의 공주의당 금동관음보살입상을 비롯 비문화재(분청사기인화문접시, 청자상감포류 문대접, 청자상감 국화문고배형제기)를 포함 모두 4점이었음.

○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1999년 5월 문화재관리국에서 승격된 이후 지난 2002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공소시효에 제한이 없도록 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도난상태는 2001년 19건 252점, 2002년 22건 115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이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우려감을 지울 수 없음.

○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박물관 측은 “유물을 도난당한 제2전시관은 지난 73년 준공돼 강당으로 사용하다가 1996년 무렵부터 전시실로 개조당초부터 구조 자체가 허술했으며 시건 장치 등 안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내년 초 새로 신축되는 박물관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문광부와 박물관장 또한 새 박물관 이전신축(10월 30일 이전)으로 중복투자를 우려 박물관에 대한 투자를 간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여 시설투자 부족에 원인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 그러나 박물관 내부에서조차 이번 사건은 보안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시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 두고 적외선감지기를 꺼버리는 등 안이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음.(근무자세 확립 필요).

▷ 이에 따라 보안시스템 운영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자체적 보안시설 운영을 위한 경성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주박물관의 보안장비는 CCTV 4대, VCR 11대, 모니터 1대, 적외선감지기 6대 등이며 12개 박물관 중 상대적으로 많은 유물 수(9441점)에 비하여 정원(12명)·예산(12억)·관리요원(7명)·감시시스템 등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리상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박물관의 유물관리 및 보안시스템 실태가 상당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확인.

◇ 국립중앙박물관 및 11개 지방박물관의 경비·보안 실태

○ 대부분의 지방박물관은 폐쇄회로TV 등 웬만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보안시스템의 허술한 운영과 안이한 근무자세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임.

○ 중앙박물관이 5월 16일 공개한 12개 국립박물관의 보안시스템 실태에 따르면 중앙박물관에는 현재 수장고와 전시실 내외에 49대의 폐쇄회로TV 카메라와 각종 첨단 탐지기 744개, VTR 모니터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관을 포함한 16명이 전체 보안시설을 관리 방재실과 건물주변에서 근무하고 있음.

○ 또 전시실 출입구와 외부로 통하는 곳에는 카드식 출입문 개폐 시스템과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침입자가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열 감지기와 진동감지기 등을 통해 유리창이나 진열장이 깨지는 것은 물론 침입자가 눈동자만 노출해도 즉각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실 내의 모든 상황은 24시간 녹화된다는 설명임.

○ 이에 따라新光섭 유물부장은 “이러한 보안시설은 중앙박물관 외에도 2002년 개관한 춘천박물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박물관에도 설치돼 있고 1978년 개관한 광주박물관도 사회교육관을 보수하면서 보안시설을 보완했다”면서 “현재 국립박물관의 보안시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최근 국보·보물 문화재 도난 및 강탈 일지

○ 1995년 1월 28일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국사전 보관 ‘송광사 16조사’ 중 1, 2, 13세 조사를 제외한 13명 조사의 진영(보물 1043호) 도난.

○ 1999년 3월 30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유 모씨 소유 ‘유근 영정’(보물 566호) 도난

○ 1999년 9월 18일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현동사 보호각 내 연안 이씨 문중 소유 ‘연안 이씨 종중 문적’(보물 651호) 공신록 1축과 공신회맹록 1축 도난.

○ 2001년 1월 6~8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H아파트 서 모씨 소유 ‘서원화개첩’(국보 238호) 도난.

○ 2002년 11월 12일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선암서원 장관각 ‘배자예서운략판목’(보물 917호) 83판 중 45판 도난.

○ 2003년 5월 15일

충남 공주시 중동 국립공주박물관 30대 초반의
 피한 2명 침입 ‘공주의당금동보살 입상’(국보
 247호) 강탈.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관련(홍보처 공통)>

□ 현황 및 질의

○ 최근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종료 직후
 총리실 주관·각 부처 참여의 ‘포스트 월드컵 중
 합대책’을 추진한 바 있음.

○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은 문광부·행자
 부·재경부·산자부·국정홍보처 등 1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와 기업 경영에 히딩크식
 리더십을 접목 ‘홍’의 문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
 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 철저한 사후관리 및 기념사업 △ 월드컵
 의 경제적 효과 확대 △ 선진문화 국가 육
 성 △ 지방의 세계화 및 선진시민의식 지향
 △ 국가 이미지 제고 등 5개 분야, 79개 항
 목으로 이뤄져 있음.

○ 그러나 2003년 6월 현재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제가 전무한 실정이며 사실상 종합대
 책을 총괄하던 총리실 산하 ‘월드컵·아시아드
 지원점검단’ 또한 지난 2002년 10월 부산 아시아
 경기 이후 해체되어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주체조
 차 사라진 상태임.

○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지난 2002
 년 말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이 이미 폐기됐
 다고 보고 있을 정도라고 함.

▷ 그동안 참여부처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
 가?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학계반응

○ 정부 스스로가 애프터서비스 마인드를 가져
 야 한다(서울대 김광웅)

○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은 체계적이고 철저
 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조적으로 접근했어
 야...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했다가 결국 실
 종되어버린 것(삼성경제연구소)

○ 또한 최근 문광부가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
 지 제고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 문화를 통한 국
 가 이미지 제고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하여 타부
 처(국정홍보처)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지
 적이 있음.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포스트 월드컵 추진현황

○ ‘국가이미지 제고 실무대책반(T/F)’ 구성·
 운영

· 기간: 2002년 8월 1일~12월 31일

· 구성: 국조실·재경부·교육부·산자부·문
 광부·국정홍보처 등 6개 부처 2~5급으로
 9명으로 구성

○ 국가이미지제고 종합계획 수립

· 2002년 10월 31일 제2차 국가이미지제고위
 원회 회의 개최 시 종합계획수립

· 2002년 12월 31일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부처
 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회의개최 및 운영실적

· 국가이미지제고실무위원회 개최: 3회(2002년
 7월 5일/ 2002년 9월 17일/ 2003년 5월 14
 일)

·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개최: 2회(2002년 7월
 8일 / 2002년 10월 31일)

○ 2003년 7월 중 3차 위원회 개최 추진 중(국
 무조정실)

<‘남북 민족평화체육축전(가칭) 추진계획’ 관련>

□ 현황 및 질의

○ 지난 4월 상임위 당시 민족평화체육축전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요구와 관련 문광부는 김원웅 의
 원이 일제강제연행자료전시회(2월 18~22일)기간
 중 아태 이종혁 부위원장과 민간체육교류 추진에
 관해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며 이후 북측 민화협
 의 초청으로 김 의원이 4월 8~12일 평양을 방문
 아태 전금진 부위원장과 오는 7월 제주도에서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관련 당시 김 의원은 민족평화체육축전은
 순수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행사로 진행될 것
 이며 전 부위원장과 공동서명한 합의서를 공개하
 고 체육계·문화계 대표들과 의논해 이른 시간
 안에 실무협의체를 구성 5월 중 금강산에서 북측
 과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 했었음.

▷ 문광부 답변에 따르면 금강산 협의가 5월
 중 SARS여파로 연기되고 6월초에 다시 개최된
 다고 하였는데 현재 평화축전 추진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

○ 문광부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 전향적 방향에서 남북 체육문화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전향적 방향의 구체적인 수
 준을 언급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통일부 국정원
 과 협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

황은 무엇인가?

<캐릭터 전략산업 육성 관련>

□ 현황 및 질의

○ 문광부는 지난 4월 30일 캐릭터 산업을 핵

심적인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캐릭터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캐릭터소비시장의 성장추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내캐릭터소비 시장 규모	41,200억원	52,771억원	67,592억원	86,575억원	110,889억원
국산캐릭터내수 시장점유규모	14,420억원 (전체 30%)	18,470억원 (전체 35%)	27,037억원 (전체 40%)	38,959억원 (전체 45%)	55,445억원 (전체 50%)

○ 이에 따라 “2007년까지 민관 유치 자금 20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캐릭터 시장규모를 현재 5조 원에서 10조 원대로 끌어올리고 현재 35%에 이르는 국산 캐릭터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 고 밝히고

○ 이를 위해 △ 우수 작품 발굴과 제작비 보조 등 캐릭터산업의 기반 구축 강화 △ 해외 우수 마켓 참가 지원 등 해외 수출 확대 △ 캐릭터 전문 상설 마켓 조성 등 유통구조 현대화 △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제도 개선 △ 유관 산업 간 연계 활성화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국내캐릭터산업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특정 캐릭터 개발·라이선스 업계의 경우 업체의 50%가

자본금 5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고 종업원 10명 이하의 업체도 95%나 차지하는 등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것임.

▷ 이외에도 불법복제로 인한 성장가능성의 잠식, 장기적 안목의 마케팅 전략 및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은?

<게임투자조합 관련>

◇ 현황 및 질의

○ 현재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임산업이 일부 상위 업체들의 싸늘이식 경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독자적 게임 개발보다는 돈벌이가 되는 해외 유명게임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외프로그램(게임)의 국내시장 유입현황

(단위 : 1,000\$)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액	46,646	55,874	65,340	195,254	204,779

○ 이에 대해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들은 대규모 투자여력이 있는 이들 업체가 능력 있는 게임 개발자 육성이나 신규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내 게임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03년 현재 국내게임시장 규모는 4조 원으로 1800여업체가 등록 활동 중임.

○ 대비책으로 문광부는 1999년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설립, 우수 게임 및 개발업체에 대

한 직접 투자로 국산게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투자조합’을 결성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투자 및 관리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게임투자조합 사업내용

○ 문광부와 투자전문회사 공동으로 게임전문 투자조합 운영

· 1호 투자조합(한솔창업투자)

150억(국고 50억)/2000년 11월 → 지원업체 11

개(95억)

· 2호 투자조합(CJ창업투자)

100억(국고 25억)/ 2001년 12월 → 지원업체 4개(25억)

· 3호 투자조합(한솔창업투자)

100억(국고 25억)/2001년 12월 → 지원업체 4개(25억)

○ 투자방법: 주식지분투자 / 프로젝트투자

※ 2004년 예정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 등 투자조합 신설 준비 중

▷ 문광부가 파악한 현재 투자조합의 게임시장 활성화 역할 및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일부업체에 중복투자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방지방안은 무엇인가?

▷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게임업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동안 게임산업은 문광부를 주무부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자부, 정통부 등과 업무상 중복되어 혼선이 있었음.

▷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업무를 일원화해야 하는데 부처 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전망인데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인터넷 도박 관련(영등위)>

□ 현황 및 질의

○ 그동안 대형 인터넷·게임 포털업체들이 사이버머니의 현금충전 서비스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넷마블 등 게임관련업체가 인터넷상 도박하우스를 제공하여 사이버머니 매매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제재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영등위 측은 당장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음비계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기다려달라는 입장임.

○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임.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타인 명의를 도용해 사이버 머니를 조성해 이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인터넷 도박 하우스 제공 포탈업체

○ 넷마블(대표 방준혁)은 문제가 됐던 세븐포커 게임용 사이버 머니 현금충전 아이템과 고스톱 머니 초기화 아이템을 그대로 팔고 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대표 이재웅) 역시 포커게임에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로버 아이템을 계속 판매하고있음.

○ 또한 NHN(공동대표 이해진, 김범수)과 엠게임(대표 손승철)은 직접 충전 아이템은 아니지만 아바타와 같은 일반 아이템을 사면 포커머니나 고스톱머니를 제공하는 간접 충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이 중 문제가 제기됐던 포털 가운데서는 세이클럽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대표 박진환)만이 유일하게 현금충전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고 있음.

○ 현행 음비계법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해서 서비스하는 것)와 등급을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강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 현황 및 질의

▷ 사업 개요

○ 위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12-3외 19필지

○ 규모: 부지면적 1만 5000㎡

○ 총사업비: 10억 원 (국비 5억, 시비 2억, 군비 3억)

○ 사업기간: 2004년 1월~2004년 12월

▷ 2004년 국고지원 요청사항

○ 국비 5억 원 중 2004년 시설비로 5억 원 요청

▷ 검토의견

○ 문광부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부지 5000평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치 못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인구밀도가 낮음) 등을 감안하여 문광부의 획일

적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음.

▷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미술문화공간(예촌)건립 관련>

▷ 사업개요

○ 위치: 인천 중구 해안동 1가 10-1외 33필지

○ 규모: 8474㎡(건축물: 4600㎡)

○ 총사업비: 90억 원(국비 45억, 시비 45억)

○ 사업기간: 2000년도~2005년

▷ 인천시의 2004년 국고지원 요청사항

○ 국비 45억 원 중 2004년 시설비 25억 원 신청

▷ 검토의견

○ 인천시에서는 관광특구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비신청하였으나

○ 문광부 관련 부서에서는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사업으로 분류하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공립문화기반 시설 건립지원사업 관련 부서에서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는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 시설물 자체가 인천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건물임을 감안해 리모델링 하려는 것임.

○李協 委員

<문화재(국보) 보안관리 이대로 좋은가?>

○ 공주박물관 유물강탈사건은 우리 문화재 보존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특히 국보가 도난당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 박물관은 그래도 옥내라서 방법 보안 면에서 일단은 옥외보다는 다소 안전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주로 옥외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총괄하는 청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청장, 공주박물관 강탈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청은 관련 문화재 관련 보관시설의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는지?

○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에 대해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보는 3.6%인 305점에 불과한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강탈로부터 모든 문화재를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 스스로 지정한 국보에 대해서는 특

별한 대책을 세워 도난·강탈·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05점뿐인 국보에 대해 소유자나 관리단체 현황 외에는 실제로 어떤 상태에서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그 실태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국보 제247호인 금동관음보살입상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도 강탈당했다. 하물며 국립박물관보다 보안상태가 더욱 부실할 것으로 보이는 사찰이나 개인 소유 국보에 대해서는 도난의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 국가지정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 제16조에 따르면 소유자의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문화재청장이 지자체, 법인, 단체 등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찰과 개인 소유 국보는 전체 305점의 39%인 118점이나 되고 또한 이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91점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사찰과 개인 소유 국보에 대해 관리단체를 지정 관리케 하지 않고 대부분 직접 관리에 맡겨두고 있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들이 국보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기에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보는데 이들에게 맡겨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국보를 소유 관리하는 사찰과 개인에 대한 보안시스템 점검을 통해 시스템 설치 지원을 하거나 관리단체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다 철저한 방법 보안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적당주의로는 문화재기금설립 기대 난망>

○ 문화재는 한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어 예산 증액 요구와 함께 문화재기금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문화재청의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5월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간 기금을 400~500억 원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6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

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또한 문화재기금 신설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욱이 공주박물관 강탈 사건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은 기금재원 확보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내부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해 왔다.

청장께 물췘다. 청장은 한 일간지에 게재된 기고에서도 기금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서 아직도 내부검토중일 뿐인데 조속한 설립이 언제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설립이란 목표를 이루고야 말췘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또한 지난해 8월 발표한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계획에서 용역 후 공청회와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 문예진흥원의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를 앞두고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 로또수익금 배분, 국가예산 확대지원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해 문화예술계와 함께 로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국무총리가 로또 수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문예진흥기금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청장은 문예진흥원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은 기금설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 바란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사태가 발생하면 항상 부족한 예산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듯 췘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문화재기금설립에 대한 것은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기존 기금도 없앤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런 추세속에서 기금설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다면 설립이란 그저 구호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행여 기금설립이 어렵다보니 그냥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적당히 일을 하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은 아닌가?

○金成鎬 委員

<문화재 여름철 자연재해에 무방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비 시급히 서둘러야>

- 여름철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의 문화재 관리는 훼손 후 보수·복원이라는 사후대책에 집중되어 있음. 계획적인 사전점검 및 환경정비 등 예방적인 문화재 보호정책이 요구됨.

-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마련과 특별정비기간, 관계기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두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여름철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문화재 손실은 151건이며 이 중 2003년 6월 현재 피해 복구 완료된 문화재는 114건, 피해복구 진행 문화재는 37건으로 조사됨.

○ 복구진행 중인 문화재는 강원 20건, 경북 8건, 제주 5건, 전남 2건, 충남 1건, 부산 1건으로 이상의 복구진행 중인 문화재는 또다시 자연재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더불어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전체 8478건 가운데 60%가 넘는 5871건의 문화재가 ‘자연재해 시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남.

○ 자연재해는 해마다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고 이에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문화재 역시 해마다 훼손의 위협을 안고 있음.

○ 특히 올해에는 어느 해보다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으므로 철저한 재난대비가 요구됨.

□ 현재의 문화재 관리는 훼손 후 보수·복원이라는 사후대책에 집중되어 있음. 계획적인 사전점검 및 환경정비 등 예방적인 문화재 보호정책이 요구됨.

○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등 훼손 문화재의 보수 정비사업은 항상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예산 중 일정액을 사후관리비로 책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문화재 복구비 등에 사용하고 있음. 2002년 사후관리비는 20억 4800만 원, 2003년 사후관리비는 20억 7000만 원임.

○ 피해가 발생한 후에 문화재를 보수함으로써 적기에 정비받지 못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큰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문화재보호로 인해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름.

□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마련과 특별정비기간, 관계기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두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

○ 현재 문화재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 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여기에 시·도와 시·군·구가 다시 5 대 5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 경우 문화재 보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등 문화재 적기보수에 어려움이 따름.

○ 자연재해 피해의 경우 반복되고 예상되는 피해이므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예상 문화재 점검 및 환경정비, 보수정비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미리 잠정적인 국고보조예산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기간을 두고 자주 발생하는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세우고 주변환경을 자주 정비하여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 피해는 단순히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재해 위험시설에 의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받음.

○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계기관 및 부서에 자연재해 대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함께 관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임.

질 의)

1.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훼손 후 보수·복원이라는 사후정책에 문화재 관리가 집중되어 있음.

계획적인 사전점검 및 환경정비 등 예방적인 문화재 보호정책에 철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2. 자연재해 피해의 경우 반복되고 예상되는 피해이므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예상 문화재 점검 및 환경정비,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미리 잠정적인 국고보조예산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마련과 특별정비기간, 관계기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두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鄭東采 委員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해야>

○ 지난 5월 15일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강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강도에게 유린당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관리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예방은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문화재청이 주무 부처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 문화재 강탈사건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최근 6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2363점에 이르지만, 회수된 문화재는 447점(회수율 19%)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지정문화재는 총 87점 중 31점(회수율 36.1%)만이 회수된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동산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여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습범죄가 늘어나고 모방범죄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청장님!

최근 국립공주박물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재 강탈범죄가 점점 대범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에서 볼 수 있듯

이 문화재는 도난 당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예방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鐵相 委員

<문화재 도난대책과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문제>

1) 문화재 보존가치의 대국민 홍보의 문제

○ 지금부터 7000년 전 메소포타미아문명의 발상지였던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립박물관에는 17만점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 고대문명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라크 전쟁중에 모든 문화재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어 빈 껍데기만 남은 박물관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아민 박물관장은 미군 탱크 2대만 있었다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라크정부는 도난당한 문화재들이 해외로 밀반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해외밀반출은 우리나라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켰던 인물은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라고 봅니다.

장제스 총통은 중국 공산당들이 본토를 장악해 가던 1948년 본인이 이끄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수십만 대의 군인트럭으로 중국본토의 문화재를 대만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살 수 있지만 문물을 잃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하였고 당시 소장품들을 군인의 목숨과도 안 바꿀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다고 합니다.

1965년 장제스 총통이 대만 타이베이시에 건립한 고궁박물관은 런던의 대영박물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함께 세계4대 박물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급 유물만 해도 무려 62만점으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14만 7000여점에 비하면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14만 7908점, 11개 지방국립

박물관 13만 240점, 총 27만 8148점

현재 이 고궁박물관은 20여만 점을 3개월 단위로 전시하고 있는데 소장품 전체를 보는 데는 8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토록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이 강한 대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 문광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는 그 나라의 역사와 민족성과 예술적 혼을 담고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 이를 통하여 역사교육 및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문화재는 콘텐츠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재청)

2) 문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처벌 강화문제

○ 2001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도난당한 동산문화재가 5665점에 이르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발굴 유물이 2만 8000여 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90년 말부터 최근까지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0여개국에 총 7만 5266점의 문화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토록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강대국들에게 약탈당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도굴이나 약탈하여 해외로 밀반출시키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15일 공주박물관 강도침입과 문화재 도난사건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참으로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문화재가 자국민들한테 약탈당했던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난당한 문화재 4건 가운데는 1989년에 국보제247호로 지정된 ‘공주의당 금동보살입상’으로 백제문화의 상징적인 문화재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당직 근무자는 박물관 현관 셔터도 내리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근무 중이었고 특히 당직실에서 20여m 떨어진 정문에 청원경찰 2명이 근무했으나 범인이 전시실 유리를 깨고 보물을 훔쳐갔는데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층 전시실에는 범인들과 범행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6대의 적외선감지기는 모두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보를 포함하여 도난당한 4점의 유물을 보름만에 찾았지만 이토록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경비실태가 다른 국립박물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질의) 문화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의 해외밀반출이나 도굴 또는 약탈, 훼손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보다 엄격하고 강력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재보호법 처벌규정을 보다 강하게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80조에 문화재 해외 반출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제81조에 문화재를 손상, 착취, 은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82조에 매장문화재를 도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음.

▷ 질의) 다음은 문광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11개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보안장치나 경비일지에 대한 점검은 어떠한 형태로 해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국립공주박물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전시관 내외부에 폐쇄회로 TV 4대와 열감지기 2개, 적외선감지기 3개, 특수열쇠 20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보안장치를 여타의 박물관에도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국립박물관의 인력을 가지고 보안인력을 충당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의무경찰을 배치하여 보안을 기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3)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대책의 문제

○ 현재 우리나라 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보(218건)와 보물(763건)을 합해서 총 981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5개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이 총 223건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물을 포함하여 미지정된 유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라 할지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이 국가에게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문화재 현황

분 류	국 보	보 물	계
전 국	218	763	981
사립박물관	11	85	96
사립미술관	48	79	127

현재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운영이 어려워 학예연구사의 채용도 어렵고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여서 연간 평균적으로 한 개의 박물관이 약 2억 7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소장품의 도난과 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개인이 지출하기는 어렵기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질의) 이와 관련하여 문광부장관과 문화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보안장치 마련이나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항이 있습니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16조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1조를 보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 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 질의) 다음은 문화재청장께 묻겠습니다.

개인이 어렵게 구해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자치단체나 다른 단체에 관리권을 이양하고자 할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문화재청이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를 바꿨던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문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개인의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사 모아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차려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장은 애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개인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문화관광부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안전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보안시설을 갖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예사 양성 배치와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합니다.

4) 국립박물관·미술관 건립예산 국고보조 40% 증액문제

○ 현재 우리나라는 31관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222관이고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이 86관 등 총 339관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현황

박물관					미술관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30	49	113	84	276	1	8	52	1	63

▷ 질의) 장관께서는 이러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숫자가 세계 주요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재 미국은 박물관 숫자가 4609관으로 1관당 인구수가 5만 9000명이고 가까운 일본은 3492관에 인구수가 4만 명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339관에 14만 2000명으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고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문화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세계 주요국가 박물관 현황

국가	인구수(A)	박물관수(B)	1관당 인구수(A/B)
미 국	2억8천만 명	4,609관	5.9만 명
프랑스	6천만 명	1,300관	4.5만 명
캐나다	3천1백만 명	1,352관	2.2만 명
일 본	1억3천만 명	3,492관	4만 명
독 일	8천2백만 명	4,034관	2만 명
폴란드	3천9백만 명	551관	7만 명
한 국	4천8백만 명	339관	14.2만 명

▷ 질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96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현재 국비 30%, 지자체 70%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9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8관으로 8년 동안 112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4관에 286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이 낮아 70%의 충당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립이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내용물을 구입하지 못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1조 원대가 넘는 문광부의 연간 예산 가운데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물관·미술관 건립사업의 지원입니다.

질의) 그래서 현재 국비 부담 30%를 40%로 늘려 약 95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지자체의 부담이 훨씬 경감될 것으로 봅니다.

답) 이와 같은 지원대책이 마련됨으로써 박물관·미술관 건립이 활성화되어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과 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에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확충의 문제>

□ 현황 및 문제

○ 과거에 문화체육부에서는 1996년을 ‘문화복지 원년의 해’로 97년을 ‘문화복지 확산의 해’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각종 매스컴이나 도시의 전광판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국가 예산 가운데 1%를 문화예산으로 편성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백범 김구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의 힘을 키우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73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현재 조성된 4800억 원이 95년 기금조성목표 설정 당시에는 12% 수준의 금리에 준해서 이자만을 가지고 문화예술계의 지원재원을 삼고자 했으나 현재 금리가 4~5% 수준에 불과하여 문화예술의 지원수요 증가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은 금액상으로는 총지원금 신청액의 30% 내외, 건수상으로는 35%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었고, 문광부장관은 기금조성정책을 사업비 부족

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향후 5년간 2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답) 질의) 그러나 과거 정부가 이룬 국가 전체 예산 속에서 문광부의 예산 1% 확보라는 업적을 지켜나가면서 문예진흥기금 부족분 연간 5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액은 국민 1인당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평균치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말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중단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문화예술 수요는 증대일로에 있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예진흥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정책개발원이 연구정책자료로 2001년에 내놓은 ‘문예진흥기금 적정규모 산정 및 재원확충 방안’이라는 자료집에 의하면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1조 8000억 원 가량을 적정규모로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1년까지 1조 4000억 원 가량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야만 문화예술 지원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 질의) 문광부는 향후 5년간 사업비 부족액 2500억 원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과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향후 경륜·경정 수익금 매출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2834억 원, 2005년 2528억 원, 2006년 3020억 원 등으로 이러한 수익금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경주는 15%, 지방자치단체 시행경주는 2.5% 배분 기준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 낸다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363억 91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나 문화정책 관련 학자들의 여론도 문예진흥기금 재원마련을 경륜·경정의 수익금에서 일부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 질의)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조성에 활용하자는 여론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방안의 문제>

□ 현황 및 문제

○ 문광부장관께서는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청소년 문화예술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를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교류의 지원,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성문제도 예산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청소년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일탈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기금 용도를 보면, 관광호텔·가족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설지원,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시설의 개보수 지원, 국민관광시설 확충 지원, 일반여행업, 카지노업, 기념품 판매업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보조, 관광연구기관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보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하게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치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외의 관광 숙박시설은 현재에도 약 3000실이 부족하고 2010년에는 약 1만 70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질의) 이토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금을

이용하여 순수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문제>

□ 현황과 문제

○ 지난 4월 8일 청와대 업무보고 시 문광부장관께서는 기존의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원회가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정책승인, 사후 결과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자율기구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여타의 분야도 위원회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광부는 또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3월 12일 감사원의 조사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6청 등 38개 기관입니다. 이에 비해 법적으로 독자적 행정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만 35개로 숫자상 중앙부처와 같다고 합니다.

이밖에 각급 국가기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325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1만 5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을 보고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문광부 산하에도 5개의 위원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의 민주화, 다원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수의견을 통한 의사결정이 행정부의 폐쇄주의, 관료들의 독선과 편견에 제동을 걸고 다양한 의견과 전문지식을 반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집단의 대립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수 위원을 통한 이권개입이 많아지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1만여 개가 넘는 위원회를

보면 일부에서는 과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갈등, 정부조직의 비대화도 행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밥만 먹고 헤어지는 위원회, 회의록도 없는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어느 일간지의 경제부 기사가 쓴 컬럼을 보면 “책임 있는 정부는 위원회를 만들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위원회 제도의 비극이 출발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의) 국가 정책을 민간 자율기구에 맡긴다는 명분하에 이토록 새정부 들어 문광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 질의) 그리고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 시 거론되었던 내용이지만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문화원,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업무분산을 초래하거나 예산낭비가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정신은 판매대상이 아니고(Not for sale), 문화는 협상대상이 아니다(Not for negotiation)>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직후 프랑스 영화 감독 코스타-가브라스는 한 미국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미국 영화는 프랑스 시장의 65%, 이탈리아 시장의 85%, 독일 시장의 90%, 영국시장의 거의 전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람니까?”

유감이지만 미국 영화의 완전 점령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은(미국) 일본 차 수입에 여러 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상 즉 문화를 지키려는 보호 규정이 그토록 해로운 행위입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한창입니다.

미국이 한미투자협정의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게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요구하자 일부 경제계에서는 스크린쿼터가 관객한테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제도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스크린쿼터 제도는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는 영세한 자본과 기술력의 한국영화가 거대자본과 첨단기술로 이루어진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외국영화와 맞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영화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올해 50%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란 등 외화에 폐쇄적인 국가와 자국영화를 선호하는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 영화의 자국영화 점유율은 이미 제작년부터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스크린쿼터 제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를 제작해도 상영관을 잡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이 결코 우리 영화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영화 ‘취리’나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최근 영화인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질의) 따라서 스크린쿼터 제도는 관객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제도가 아니고 관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영화들의 총 제작비를 합해도 할리우드 영화인 ‘타이타닉’ 한편 제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의 현실은 외소할 뿐입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하면 배급이 당연히 줄 것이고, 배급이 감소하면 제작은 몇곱으로 줄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국내 영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 투자협정의 허와 실

○ 또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제계 일부의 경고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작은 이익이란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큰 이익이란 한국과 미국의

투자협정 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로 한미투자협정이 처음 제기되었던 98년도와 현재의 국내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한미투자협정의 주 내용은 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될 경우 공장설립 이전 단계부터 내국인 대우를 해주고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것으로 미국자본의 대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제기된 시기를 보면 98년 IMF외환위기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때입니다.

9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39억 4000만 불로 말 그대로 ‘국가가 망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1달러의 외화가 급했고 전 국민이 금을 모아 달러를 사들이기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2003년 5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283억불로 현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은 외환부족이 아닌 것입니다.

- 둘째로 현 상황에서 한미투자협정이 국내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인들은 국내에 사업체 신설, 주식 및 채권투자, 건설공사 입찰, 면허 및 인·허가, 부동산 취득 등 각종 투자활동에 우리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국내 우량기업을 언제든 인수·합병(M&A)할 수 있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인수 등을 놓고 현대, 삼성, LG 등 재벌그룹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투자에 따른 이익은 곧바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기업들은 첨단 경영 기법으로 무장한 미국 기업과 버거운 경쟁을 하게 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도태나 예측화, 무제한적인 투자자금 거래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계 일부에서는 투자협정 체결로 40억 달러의 투자 유치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셋째로 미국과 투자협정을 한 국가들의 면면

을 살펴보면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카메룬, 콩고공화국, 체코,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자메이카 등 주로 동유럽의 체제 전환국과 제3세계의 최빈국들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 미국과 양자협정 체결국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카메룬, 콩고공화국, 체코,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몽고, 모르코, 파나마, 폴란드, 루마니아, 세네갈,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아, 터키, 우크라이나,

- 협정체결 후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펠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요르단, 리투아니아, 모잠비크, 니카라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심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얼마를 뜯어가도 좋으니 지금 당장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매달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국가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안좋은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 문화상품은 일반상품과 다르다.

○ 게리쿠퍼나 존 웨인이 열연하는 ‘서부의 사나이’는 어린 시절 많은 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백인의 인디언 사냥은 그들에게 정의였고 영토와 생존을 지키려는 인디언의 저항은 악행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의 열연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 ‘로마의 휴일’의 배경이 되었던 스페인 광장은 전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화처럼 최근 만들어지는 우리 영화도 아시아에 제2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의 사무직 여성들은 ‘엽기적인 그녀’에 폭발적 열광을 보냈고 ‘공동경비구역 JSA’는 일본에서 한국 영화의 이미지를 바꿔냈으며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에도 예술 영화가 있다는 것을 홍콩에 알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의 모 여행사가 영화배우 장동건이 출연하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

현장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일반 여행상품보다 3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했는데도 4000여 명의 일본팬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한 국민의 고유한 정서와 정신, 문화가 담긴 종합예술이고 산업 전반에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이며 캐릭터·이미지산업, 관광산업의 중추인 것입니다.

▷ 질의) 따라서 스크린쿼터의 폐지나 축소로 인한 영화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한 분야의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고유한 정서와 정신의 붕괴며 21세기 중심산업의 붕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과정에서 캐나다와 달리 미국의 압력에 의해 문화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멕시코의 문화정책이 폐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문화 정체성 유지는 물론 문화산업이 보호 육성되지 못해 문화 창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피폐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랜 피노체트 군사독재로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던 칠레 문화는 2001년 미국과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BIT)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무역협정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도 1994년 가츠(GATS) 협상을 기점으로 모두 개방한 결과 위기에 빠져 있으며 문화 정체성의 위기를 인식한 정부가 뒤늦게 방송, 음반 등에서 쿼터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가츠(GATS)규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우리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크린쿼터 제도를 영원히 유지하여 우리 영화 보호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영화검열 철폐, 스크린쿼터 유지, 시장점유율 40% 달성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시장 만능주의를 극복하지는 못했고 한국영화 발전의 지속과 문화 복지의 보편화를 보장하는 공공영상부문과 영상문화교육의 토대를 다지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거뒀으나 미래를 확실히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스타나 자본만 호시절일 뿐 문화노동자 대부분은 아직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문화분야의 책임자로 대중예술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관을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책임자와 그 주축을 이루는 전문가 집단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창동 장관을 책임자로 맞은 우리 문화분야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관에게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 전반의 최대 이슈는 '다양성'입니다. 상업성과 공공성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주류와 비주류가,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첫째 원리로 삼는 문화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소신과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꺾이지 마시고 소신과 철학을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 관련>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유치가 결정되기까지는 정확하게 보름 남았습니다.

2010년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일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그러하듯이 10주년, 20주년 하는 시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성대한 행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2010년 동계올림픽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따른 통일로 가는 대장정 10주년이라는 길목에서 세계인의 축하를 받는 축제분위기로 승화시켜야 하는 민족적인 거사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2010년 동계올림픽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영광된 축제일 뿐만 아니라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을 털어버리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유치를 준비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께서 전 세계인에게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

원은 생각하면서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지난 5월 2일 IOC가 유치 후보지 현지실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창에 대해서 평가결과의 보완사항으로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과 숙박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지난 5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OC 집행위원회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별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그 대안에 대한 IOC 집행위원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5월 15일 개최된 IOC 집행위원회에서 장웅 북한 IOC 위원이 2010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개최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여 남북한 화해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분단국 개최에 따른 세계 평화에의 기여와 전 국민적인 적극적인 지지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로이터, CNN, LA Times 등 세계 주요언론들은 IOC 평가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여 ‘3개 도시 모두 대회를 훌륭히 개최할 수 있고, 도시 간 순위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3자 간 경쟁임을 시사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2일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향후 어떻게 홍보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하계U대회 준비 관련>

세계 대학생들의 축전인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이 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의 아마추어 올림픽’으로 불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유니버시아드에는 최근 북한의 출전 결정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재일동포 100여명이 응원단으로 참가를 결정하는 등 금번 대회가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젊음의 향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 및 관계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대회 준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화 채화 및 봉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의 채화지로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최고교육기관인 서울 ‘성균관’과 제1회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 도시인 이태리 ‘토리노’시로 결정되었고 성화의 합화지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고 새천년 영

원의 불이 안치된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에서 합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8월 10일부터 12일간 전국을 순회하여 대구하계 U대회의 개최를 알리고 그 의미와 국민적 열기를 승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의 기본 정신은 사상, 이념, 종교, 인종, 문화 등 모든 경계와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가 되려는 인류 평화의 꿈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대구 U대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남북의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재일본 조총련이 응원단을 보내는 등 평화와 통일의 장이 되어 진정으로 한민족이 하나되는 나아가 전 인류의 하나됨을 감동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화 채화 및 봉송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균관에서 채화된 성화는 인천, 안양을 거쳐 한반도 남쪽으로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이나 지난 14일에 연결된 경의선, 동해선과 같은 역사적인 현장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성화 봉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본 위원으로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남북한 대학생들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남북 분단의 경계를 넘어서, 평화와 통일의 축제마당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성화봉송로를 재조정하여 전 세계인에게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 및 조직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U대회 입장권 판매실적을 보면, 개회식 입장권은 3.12%, 폐회식 입장권은 0.27% 등 개·폐회식 입장권이 1.62%밖에 판매되지 않았으며 일반경기 입장권은 겨우 0.03%에 불과합니다. 특히 해외 판매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 문광부 장관! 이렇게 입장권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입장권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 委員

<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조속히 매듭지어야>

최근 문광부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을 갖춘 방송영상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은 방송위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문광부에서 계획서에서 방송법 92조(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너무 확대 해석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임 김성재 장관의 대정부질문 시 답변이나, 인수위 보고서, 이창동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타났지만 이번에 발표한 계획 역시 문광부의 방송영상정책권에 대한 강한 집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영상관련 법을 독립시켜 문광부장관이 관장하겠다는 데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위원회의 출범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방송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출범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이에 따른 법제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중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러한 출범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일관된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주전문채널 설립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광부의 주장처럼 지상파 방송 3사가 방송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외주전문 채널을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외주전문 채널의 성패는 콘텐츠 확보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전문 채널은 업계의 기술축적과 그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개발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채널을 신설할 경우 질 낮은 콘텐츠의 집합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콘텐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예산 나눠먹기 채널로 변질될 가능성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외주정책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내부에서 이미 지난 3년간 평가와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외주전문 채널의 설립과 인허가 문제, 재원 조달 문제는 방송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방송위원회와의 정책적 조율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자의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광부가 애초 계획한 바에 따르면 외주전문채널이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상파 방송의 외주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외주전문 채널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외주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파가 독점하고 있는 콘텐츠를 독립 프로덕션으로 확대하고 PP들의 제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광부의 방침과 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외주비율을 정하고 있는 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목적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논의를 문광부가 독자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국회와 방송위원회, 문광부, 정통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해 조속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문광부가 부처의 주장만 고집하게 된다면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부처이기주의라는 오해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사의 주식환수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뉴스통신을 진흥하고 뉴스통신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4월 국회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

터 진흥회 관련 조항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흥법의 핵심부분 중의 하나인 뉴스통신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뉴스통신진흥회로의 주식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구체적인 주식이전 방안으로는

1. 연합뉴스사에서 KBS와 MBC 보유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한 후 뉴스통신진흥회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

2. 뉴스통신진흥회에서 KSB와 MBC 보유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토록 하되, 인수자금은 정부에서 진흥회에 출연하는 방안

3. KBS와 MBC가 보유 중인 연합뉴스사 주식을 정부에 조건부 기부채납하고, 정부는 관련절차에 따라 뉴스통신진흥회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각 방안이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전에 대해 KBS와 MBC 측에서는 유상이전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합뉴스와 일부 언론계(민언련 등)에서는 무상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 2월 KBS와 MBC에 이전된 49% 지분은 당시 신군부 정권이 통신사 장악을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강제로 넘긴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따라서 과거사 청산과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20년 전 강제적 주식이전을 주도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이전 대책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청 승격 법제화 서둘러야>

나날이 멸실, 훼손되어가고 있는 문화재 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1급기관인 문화재청을 차관급의 문화유산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청 승격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양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조직법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위로 이를 넘김으로써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청 승격은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

승,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인하여 수많은 매장 문화재와 보호가치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지금도 파괴, 훼손되고 있으며, 불교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등 보호해야 할 대상문화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재 업무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문화재청의 조직은 거의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1980년 지정문화재가 2900여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8400건으로 3배로 늘어났는데 비하여 문화재청 직원 수는 1980년의 530여 명에서 2002년도에는 불과 60명이 늘어난 590명 수준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위로 넘길 경우 검토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열악한 문화재 행정기능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멸실이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문화유산청으로의 확대 개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協 委員

<개방은 추세 그러나 신중하게 해결해야>

○ 지난번 한일정상 공동성명에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가 포함됨으로써 추가개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본 위원은 한국과 일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길은 양국민의 왕래를 늘리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수성을 띠고 있어 인적·문화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그런데 대중문화개방이 의제가 됐던 이번 대통령 방일 때 장관이나 문화예술계 인사가 한사람도 수행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실 우리나라에 스며든 일본대중문화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막는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막을수록 더욱 은밀하게 침투하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가창음반이나 성인용 비디오 등은 현재 제한되고 있지만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대중문화의 개방 확대, 나아가 전면 개방의 초점은 개방의 범위와 속도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국민 여론도 개방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그동안 개방을 통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한다.

▷ 언론들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개방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측이 맞다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문광부가 추가개방을 심도 있게 검토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 대강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나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우리 문화산업에 끼친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충격이 미미하다”고 하고 있고 장관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동안 일본영화나 공연의 실적 등으로 미루어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미리 요구한 자료에서는 아무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궁금한데 이것이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가? 기자들에게 장관이 거론한 ‘77편의 대일 영화수출’ 외에 “충격이 미미하다”는 판단과 자신감의 근거를 대략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가 월드컵이 끝난 후 일본대중문화 추가개방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방에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의 범위나 시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지? 아니면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문광부가 결정하게 되는지?

▷ 추가개방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계,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개방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 등을 가지고 있는지?

▷ 정부가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지만 여전히 뒤쳐지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며 해당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그리고 향후 개방부문에 대한 양국 간 비교자료가 있는지?

▷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일본대중문화가 저급문화이고 특히 폭력성 선정성으로 인해 청소년층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용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국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정서까지도 폭넓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

<방송정책권 두고 다투고 있을 때인가? 외주 전문채널 설립 신중한 검토 필요>

○ 최근 언론들은 문광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권한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지난 6월 4일 신임 방송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개정을 통해 방송위가 방송 정책과 행정의 주무기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 장관은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문광부가 방송위에 맞불을 놓았다고 보도했다.

방송과 관련하여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나 방송영상산업의 지원육성 등 각종 현안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와 방송위 간의 영역 다툼이 첨예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질의토록 하겠다.

○ 방송영상산업은 21세기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의 절대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방송영상산업진흥을 위한 방송위의 노력이 미비했던 점을 감안하면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어찌 보면 문광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크게 평가될 일이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 또는 ‘부처 이기주의’ 등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개혁의 전령사라 할 이 장관도 결국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하는 표현조차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방송위는 이번 계획발표와 관련해 문광부가 명백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방송법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방송정책권의 방송위 일원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 계획의 수립과정이나 발표와 관련해서 방송위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송위 주장과는 달리 문광부가 방송정책권과 방송영상산업진흥 시책수립권한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문광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7가지 주요 과제 가운데 유통선진화와 관련하여 외주전문채널 설립 추진이 포함돼 있다. 이 방안은 외주제작사들의 유통 활로 모색을 위해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일단은 평가한다. 특히 외주제작사들의 현실은 방송3사 외주제작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의 현실을 보면 방송사로부터 지급되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작은데다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불평등계약 등 개선책이 절실하다.

▷ 그런데 외주전문채널의 확보방안으로 문광부는 타당성 연구한 후 지상파 또는 PP채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언론보도 등을 비롯해 대부분 지상파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외주전문채널 설립의 재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국영채널을 만들어 정부 영향하에 두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획에 따르면 설립소요예산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20억 원으로 정부지원이라 표현하면서 그 재원이 방송발전기금이라 하고 있는데 기금을 정부예산과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지상파로 결정될 경우에 한한 것이지만 단지 또 하나의 지상파채널이 늘 뿐이고 또한 공영방송조차 너무도 쉽게 상업화되는 우리 풍토에서 지상파 신설이 자칫 시청률 경쟁이나 부추겨 방송의 저질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신규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추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광부-방송위 간의 관계상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외주제작사들을 위한 의도라면 차라리 협의를 거쳐 방송위가 맡아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金成鎬 委員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매체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정부는 매체 간 균형발전, 국가기간방송사와 국가기간통신사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뉴스통신진흥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과거사 청산과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뉴스통신진흥위원회로의 주식이전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

□ 정부는 매체 간 균형발전, 국가기간방송사와 국가기간통신사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뉴스통신진흥법 제6조 ①항은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연합 592억 원, 조선 4578억 원, 중앙 3830억 원, 동아 3498억 원, 한겨레 794억 원으로 매출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KBS)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격차는 매우 심하게 벌어져 있음(최근 3년간 연합뉴스 매출액 592억 원, 한국방송 매출액 1조 1911억 원).

○ 이와 관련 정부는 매체 간 균형 발전, 국가기간방송사와 국가기간통신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뉴스통신법 제6조 ③항과 제19조에 따라 정부는 연합뉴스와 뉴스 정보 구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행령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절차 등을 정하게 되어 있음.

○ 이 점을 감안해 뉴스통신진흥법은 “정부는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부 측 창구 일원화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에 따라 일원화된 정부 측 창구가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

○ 조속한 시행령제정이 요구됨.

□ 과거사 청산과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뉴스통신진흥위원회로의 주식이전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

○ 뉴스통신진흥법은 부칙 제1조에서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진흥회 관련 조항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식이전에 대해 KBS와 MBC 측에서는 유

상이전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합뉴스 외 언론계에서는 무상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 지난 1983년 2월 KBS와 MBC에 이전된 49% 지분은 당시 신군부정권이 통신사 장악을 위한 의도에서 강제로 넘긴 것이므로 과거사 청산과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주식 이전을 무상으로 이전, 해결해야 할 것임.

질의)

1. 뉴스통신진흥법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장구)와 관련,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문화부장관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

2. 구독계약을 위한 정부 측 장구가 정해지지 않아 시행령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3. 과거사 청산과 매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뉴스통신진흥위원회로의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

<종합적인 문화재 도난 방지 시스템 구축 시급>

- 국립, 시립박물관의 방법담당 인력 및 시스템을 확충, 강화해야 한다.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도난 방지 시스템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 국립, 시립박물관 방법담당 인력 및 시스템을 확충, 강화해야 한다.

○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의 방법 담당 인력은 총 395명으로 이 중 직원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직원 170명(43%), 방호원 67명(17.0%), 청원 50명(12.7%), 용역 108명(27.3%))

○ 대부분의 지방박물관이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학예사를 비롯한 박물관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방재 보안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또한 전담 직원이 배치돼 보안시설을 총괄하는 방재실이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박물관 방재·보안을 위한 전담인력확충과 자체 보안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급,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무방비 상태인 일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경비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국가

적인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임.

□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도난 방지 시스템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 문화재청 보고에 따르면 최근 6년간(98년~2003년 5월) 문화재 도난현황은 총 2363점으로서 이 중 지정문화재가 87점(3.7%), 비지정이 2276점(96.3%)를 차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개인소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난예방에 한계가 있으나 문화재는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 선조가 남겨주고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요구됨.

질의)

1. 국립박물관의 국보급 문화재의 강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징계 및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관계자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기 바람.

2. 국립박물관의 방재, 보안을 위한 예산과 필요인력은 몇 명인지 제시해 주기 바람.

3.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개인소장인 경우가 많아 도난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개인소장의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소장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소장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문화재청장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申榮均 委員

<신문 공동배달제 기금지원>

현재 일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문공동배달제는 유통망 개선을 통해 신문사와 지국원, 배달원, 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신문사들 간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동배달제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자가 선택한 신문시장의 인위적인 왜곡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특정언론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니 이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배달제가 추진되고 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 이미 주장되어온 신문공동배달제가 새 정부 집권초기에 일

부 신문에 대한 불만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신문이 언제 대통령 대접해준 적 있느냐, 신문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신문 때문에 못해먹겠다.” 는 현 정부의 언론관하에서는 오히려 조·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문이 계속 적자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라는 이름하에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이신문들은 메이저신문들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신문고시나 공정거래법을 통해 통제하면 되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배달제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작년의 경우 중앙일간지 중에서 조·중·동 외에 한겨레신문만이 흑자를 보았는데 이렇게 매년 적자를 보는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다는 이제는 일반 기업들처럼 신문사들 간에도 자연스러운 M&A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관련>

얼마 전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한 내용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번 내용은 2년 전 문화부가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추진전략’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로 바뀐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채 있던 계획을 버리고 새 5개년 계획을 만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계획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둘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힘들고 그 추진의도에 의문이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만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방송영상산업진흥협의회를 만들겠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방송영상산업 총괄지원기관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방송정책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采 委員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 - 모방범죄로 인한 재발가능성 철저히 차단해야...>

○ 지난 5월 15일에 발생한 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 사건은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CCTV가 낙후되어 촬영이 안 되고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리 시설의 허술함과 당직근무자의 안일한 근무태도 등 총체적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보관된 국립박물관에 흥기를 지닌 강도가 침입했을 때 무방비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립박물관도 더 이상 안전사각지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것을 의미하며 국가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자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장관님!

우리는 지난번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약탈되어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강탈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공주박물관 강탈사건은 이런 참담한 현상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방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공주박물관 강탈사건을 허술한 우리 문화재관리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 장관님!

▷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뿐 아니라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또한 성급하게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시스템이 선진화된 국가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정밀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U대회, 입장권 판매실적 심각한 수준! - 범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대책 서둘러야>

○ 올해 8월에 개최되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행사입니다.

이번 대구U대회는 세계 대학생들의 순수 아마추어 국제 경기대회로서 대회사상 최다국가 참가, 최대규모 대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03. 8. 21~31(11일간)

13개 종목, 170개국 1만 1000여 명 참여 예상

○ 또한 대회기간 중 경주세계문화EXPO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U대회는 지난 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딛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그러나 대회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권판매현황을 보면, 개최식 3.02%, 폐회식 0.23%, 일반경기 0.03% 등 대단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2003. 6. 13일 현재)

구 분	판매대상 좌석수	판매 실적	판매율
개회식	52,392	1,584	3.02%
폐회식	58,061	133	0.23%
일반경기	1,256,957	376	0.03%

○ 장관님!

170개국, 1만 1000여 명이 참가할 이번 대회는 규모 면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사상 최대로 기록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면하고 관중석이 텅 비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하철 사고를 당한 대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의 행정정보공개, 정책 투명성 확보에 기여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 지난 3월 14일 문화관광부는 홍보업무운영 방안을 통해 '행정정보공개'를 행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 원칙은 행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1단계(3월 25일~5월 30)로 375건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2단계(6월 2일~6월 14일)부터는 문화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자료방'을 설치하여 435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80여 건의 정보가 공개되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 장관님!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정보공개 노력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열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는 여전히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도 점진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호텔 영세율, 지속 적용 추진하라!>

○ 정부는 월드컵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관광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투숙 객실요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 한시적 부가세 영세율 적용(2001년 1월~2003년 6월)

○ 그동안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은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세계적 관광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즉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객실가격 인하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최근 SARS 공포 등으로 인해 위축된 관광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이번 6월 말로 시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 장관님 !

9.11 테러 이후 SARS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가세 영세율이 폐지되거나 한시적(6개월)으로만 적용된다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율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의세율(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의 최종원가에 부가가치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완전면세제도

(답변서)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高興吉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부관광부도 입맛에 맞는 보도만 긍정보도로 분류, 자의적 보도 분류 방식을 즉각 중단할 용의

(답 변)

○ 언론 보도를 분류하는 것은 특정 언론 죽이기 아니라, 과거 불건전한 언론 관계를 건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을 하되, 잘못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 사실 우리 부는 오보와 악의적 비판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한 쪽 입장만 인용한 불균형한 비판,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비판 등)

○ 지난 4월 9일부터 6월 21일간 134건의 우리

부 관련 보도 중 오보로 분류한 것은 10건, 악의적 비판으로 분류된 것은 8건에 불과했고, 건전비판은 17건이었습니다.

○ 언론 보도의 분류는 언론 탄압이나 특정 언론에 대한 규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질의요지)

2. 공정위의 신문시장 개입, 공배제 지원방침 등의 즉각 중단 용의

(답 변)

○ 공정위의 개정 신문고시에 의한 신문시장 조사 기능은 공정위 소관으로서, 이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목적은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우수문화상품의 개발, 시설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융자·투자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하여 왔으며, 융자사업의 경우 출판·영상·음반 등 문화산업 분야별로 해당 업계의 신청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성금액: 약 2600억원

※ 2003년도 중 융자지원 가능금액: 610억원

○ 신문산업 역시 문화산업의 일부이며, 신문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배달제는 구체적인 추진주체나 추진방법이 확정되어야 하겠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볼 때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및 문화상품의 유통구조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문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근거: 문산법 제2조(정의) 및 제42조(기금의 용도)

(질의요지)

3. 특정언론을 죽이기 위해 청와대, 문화부, 공정거래위가 입체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답 변)

○ 참여정부는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정도를 가야 하며, 언론과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신문고시나 신문공동배달제 등이 특정언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4. 현 정부의 정책보좌관 제도와 공무원 개혁 주체세력 형성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정책보좌관 제도는 장관의 정책결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식 개선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무원 개혁 주체세력 형성에 대하여는 공무원 조직 내에 사조직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변화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광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및 외주전문채널 설립 추진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의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관광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 그러나 가칭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아직까지 추진일정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당장 시급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현행 방송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연합뉴스사의 주식 환수 대책 관련,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문화부의 주식이전 대책

(답 변)

○ 연합뉴스사의 주주가 아닌 입장에서 정부가 이 건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대주주인 KBS와 MBC에서는 '주식의 적절한 평가와 합리적인 이전방안'이 마련될 경우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온바, 주식이전 비용을 연합뉴스사(임직원 포함)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연구검토하는 것이 연합뉴스의 언론으로서의 독립성 제고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3. 문화유산청으로 확대개편을 위하여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계획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소중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기능과 조직체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그동안 관련부처 및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해 왔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정부부처 간 기능조정 및 지방분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서 우선 문화재의 보존·활용에 필요한 일부기구 및 인력보장을 위한 직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조직 개편만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金成鎬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월드컵 휘장상품 제작업체 부도 관련

1) 월드컵 등 국가메가이벤트에 공식 상품화권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FIFA, NOC 및 OCA 등과의 계약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대안

(답 변)

○ IOC나 OCA에서 주관하는 올림픽대회나 아시안게임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어느 정도 사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월드컵대회는 FIFA가 직접 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계약관계에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 공식상품화권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교훈삼아 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대회 유치 시 사업추진 단계부

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안내를 하는 등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회장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부실업체인 ‘코오롱 TNS월드’의 부도로 인한 OEM업체를 위해 법원관리하의 물품을 활용한 구제대책과 기타 가능한 대책

(답 변)

○ 우선 코오롱TNS월드와 OEM업체 간의 계약은 상업적 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조직위가 코오롱TNS월드를 FIFA마케팅대행사에 추천할 때 잘못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OEM업체에서 조직위를 고발한 상태이므로 조직위원회가 월드컵잉여금으로 OEM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원관리하에 있는 월드컵 물품구매를 통한 간접지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작년말 1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말 해산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조직위의 일정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구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다른 대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신문공동배달제 진행상황

(답 변)

○ 신문공동배달제가 과천시에서 시범 실시된 지 3개월 정도 지났으며, 그 시범실시에 대한 결과를 신문공동배달제 추진위원회 측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 과천시범지역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공배제 주식회사 등 추진주체가 가시화되는 등 신문업계의 수용여건이 갖추어지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내용이 제시될 경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및 후속조치 관련

1)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

(답 변)

○ 매체 간 균형발전은 매체의 외형적인 매출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뉴스통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연합뉴스사가 신문과 방송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계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뉴스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해외에 알리는 등 국가기간통신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의요지)

2) 시행령 제정 진행상황

(답 변)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시행령 제정, 뉴스통신사와의 구독계약 체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연합뉴스사 경영진이 선임되지 않아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었으나, 이제 연합뉴스사 경영진도 선임되고(5월 27일), 자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6월 3일) 운영하는 등 이 법률이 시행되는 8월 말까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KBS, MBC 소유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한 의견

(답 변)

○ 연합뉴스사의 주주가 아닌 입장에서 정부가 이 건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대주주인 KBS와 MBC에서는 ‘주식의 적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이 전방안’이 마련될 경우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온바, 주식이전 비용을 연합뉴스사(임직원 포함)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연구검토하는 것이 연합뉴스의 언론으로서의 독립성 제고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 도난 방지 관련

1) 국립박물관 국보급 문화재의 강탈사건 관계자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답 변)

○ 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사건에 대하여 자체 감사(2003년 6월 3일~6월 4일)를 실시한바, 이번 사건의 원인은 당직자의 근무기강해이와 미흡한

방법시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당시 기관책임자인 국립공주 박물관장과 당직근무자, 당직담당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추진 중이며, 야외경비를 담당했던 청원경찰은 공주박물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상급기관인 중앙박물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과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무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와 방법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보강, 유사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국립박물관의 방재, 보안을 위한 예산과 필요인력

(답 변)

○ 현재 국립박물관은 금년 10월 이전하는 공주박물관을 제외한 11개 박물관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이 1일 1명씩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낮은 보수로 인한 잦은 이직과 사기저하로 방재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재실 운영인력을 정규직화(기능직)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시설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정규직 전문인력을 확보 및 용역업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세부 소요예산은 최근 실시한 보안전문업체의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裵基善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남북체육교류와 더불어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의 진행상황

(답 변)

○ 남북체육교류는 각종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및 공동입장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전향적인 방향에서 다양한 남북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은 7월 중순경 남북실무접촉을 추진하고, 대회는 9월경 제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辛基南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현장 문화예술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문화국가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장관의 역사적 소임인바, 현장 문화인의 자율적 참여 보장 계획

(답 변)

○ 현재 자율·참여·분권이라는 3대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을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특히,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문화행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한국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체제 전환, 지역별 문예진흥위원회 설립 지원과 함께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분야에도 위원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의요지)

2. 장관이 영화인의 집단이기주의만을 대변한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과 스크린쿼터 문제를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 변)

○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쿼터는 세계영화시장을 80% 이상 점유하는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우리 문화 정체성을 지키고 국제적으로 문화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스크린쿼터제도는 방송·게임·음반·비디오·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관련분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미래 핵심 문화산업인 영화산업을 지켜 주는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문화정책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영화인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법적 근거와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 합의와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3. 한글날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로서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문화민족의 긍지를 드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국경일에관한법률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경제여건과 주5일 근무제 등을 고려, 신중한 입장을 견지

(질의요지)

4. 개인의 신상명세가 노출, 행정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원칙이 부처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 업무 처리요령’에 개인신상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직원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정보 공개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榮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신문공동배달제에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이 타당한지와 정부지원보다는 신문사 간의 자연스러운 M&A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답 변)

○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목적은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우수문화상품의 개발, 시설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용자·투자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하여 왔으며, 용자사업의 경우 출판·영상·음반 등 문화산업 분야별로 해당 업계의 신청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성금액: 약 2600억 원

※ 2003년도 중 용자지원 가능금액: 610억 원

○ 신문산업 역시 문화산업의 일부이며, 신문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배달제는 구체적인 추진주체나 추진방법이 확정되어야 하겠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볼 때,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및 문화산업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문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근거: 문산법 제2조(정의) 및 제42조(기금의 용도)

○ 신문사 간의 M&A는 신문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정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2.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방송위원회와의 방송정책 주도권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관광부가 2003년 6월 4일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법상 문화관광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업무를 장리한다.

※ 방송법 제92조제2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육성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문화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이번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 동 계획의 발표를 위한 실무협의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언론에 비춰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등 관련된 기관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투자협정이 “외국인이 투자하지 아니한 국내 영화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크린쿼터 존치가 BIT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문제는 문화산업분야에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미투자협정을 문안 그대로 해석할 경우 동 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재화나 서비스사용 의무부과를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영화관에 한미투자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미투자협정(안) 제6조,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 그러나, 미국은 1998년 한미 BIT 협상과정에서 동 투자협정을 빌미로 내외국인 소유를 불문하고 모든 영화관에 스크린쿼터를 철폐 또는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우리 측의 스크린쿼터와 BIT 분리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한국영화상영의무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면제해 줄 경우 내·외국인 역차별, 헌법상의 평등권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의요지)

2. 이라크 전쟁 관련 아랍권 IOC 위원들의 입장과 남은 기간 동안의 동계올림픽 유치대책

(답 변)

○ 현재 아랍권 IOC 위원도 같은 아시아 국가라는 입장에서 한국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개인의 최종 입장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한국IOC 위원, 체육계 등 가용인맥을 총동원하여 중도성향의 IOC 위원들을 설득하고 7월 2일 IOC 총회에서 최선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평창유치의 명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인쇄시설 확보 등 정간법 개정 관련

(답 변)

○ 법정윤전시설 조항 개정, 언론피해구제제도 강화, 편집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과제 등과 관련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간법 개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계의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어 온바, 국회에서 이러한 제반견해를 종합검토 심의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4.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을 지상파로 할 것인지?

(답 변)

○ 지난 4월 23일 문광위 상임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주전문채널을 지상파로 할지,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현재, 문화관광부는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정회 등 여론 수렴과 방송위·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 도난대책과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관련

1) 문화재의 콘텐츠상품 개발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재는 민족의 얼과 정수가 깃든 문화유산으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나타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만큼 위원님이 강조하신 문화재의 콘텐츠 상품개발과 관광자원화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조선조 궁궐의 원형복원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고궁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관람객들의 고궁문화재에 대한 향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4대궁 및 종묘를 고건물과 조경중심의 정적인 관광자원에서 동적이고 입체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북궁 경희루, 흥례문 일곽, 덕수궁 중화전

일곽 등 고궁의 주요 전각 내외부 6개 지역에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까지 4개년간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창경궁 명정전, 선정릉 일곽 등 궁·능의 주요 전각 4개 지역에 야간조명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고궁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 매년 고궁에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생활용품을 재현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궁중생활상 재현전시와 조선조 궁중의례를 발굴하여 옛 모습대로 재현하는 궁중의례 재현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궁이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궁 관련 행사에 다수의 관람객이 모일 수 있도록 TV,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재 관련 신문 및 관계기관의 홍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전통춤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재의 공연전시 개최,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등 고품격 관광자원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처벌 관련

□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11개 국립박물관의 보안장치나 경비일지에 대한 점검은 어떠한 형태로 해왔는지

(답 변)

○ 박물관의 보안장치 점검은 현장에서 직접 이상유무를 감시하는 방호원과 각종 감지기 및 CCTV로 이상유무를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중앙안전실의 이중감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주박물관의 경우 별도 방재실 없이 당직근무자가 방재업무를 병행·수행하였고, 경비일지에 대한 점검은 해당 주무과에서 매일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 현재 국립박물관의 인력을 가지고 보안인력을 충당하기에는 무리라고 보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의무경찰을 배치하여 보안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협의할 용의

(답 변)

○ 현재 각 지방 국립박물관에는 행정보조, 경

비근무를 위한 공익근무요원과 방재업무를 위한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잘 활용하면 의무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보안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의무경찰 배치의 타당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요지)

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등에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보안장치 마련이나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와 국가의 사립박물관 등의 보안시설 설치 및 학예사 양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공급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보안장치 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4조(경비의 보조 등)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 운영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4년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 예산 30억 원 요구

○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학예사 전문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공급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요지)

4) 국립박물관·미술관 건립예산 국고보조 40% 증액문제 관련

□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 수와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박물관·미술관에 지원한 국가예산, 지원 박물관·미술관의 수

(답 변)

○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은 2003년 6월 현재 339관으로 14만 명당 1관 수준입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3~4만 명 당 1관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측면에서 우리 부는 2011년까지 500관(9만 명당 1관)을 조성목표로 지속적으로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박물관·미술관 지원예산은 138관 1128억 원입니다.

세계 주요국가 박물관 현황

국 가	인구수(A)	박물관수(B)	1관당인구 수(A/B)
미 국	280백만 명	4,609	5.9만 명
프랑스	60백만 명	1,300	4.5만 명
캐나다	31백만 명	1,352	2.2만 명
일 본	130백만 명	3,492	3.7만 명
독 일	82백만 명	4,034	2만 명
폴란드	39백만 명	551	7만 명
한 국	48백만 명	339	14.2만 명

(질의요지)

□ 국립박물관·미술관 건립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려야 지원된다면 박물관·미술관 건립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선진국과 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국고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정률지원보다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2. 문예진흥기금 확충 관련

1) 국가 전체 예산 중 문광부의 예산 1% 확보업적을 지켜나가면서 문예진흥기금 부족분 연간 5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답 변)

○ 우리 부는 지속적인 문화예술 재정수요 증대와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의 이자수입을 문화예술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현 문예진흥기금 조성정책을 수정하여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향후 5년간(2004

년~2008년) 문예진흥기금사업비 부족예상액 2500억 원을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 중입니다.

(질의요지)

2) 향후 5년간 2500억 원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과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우리 부는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문예진흥기금사업비 부족분 25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 217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문예진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경륜·경정 및 로또복권 수익금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배분 참여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조성에 활용하자는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경륜·경정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라는 정책결정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사회적 자원 배분의 축소라는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은(모금폐지는 단순히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금 정비를 위한 것이었음) 불문가지이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재배분하자는 의미의 정책결정도 아니었습니다.

○ 또한, 최근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생활체육 및 청소년활동 분야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고예산의 축소 추세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로또 열풍, 카드사용제한 등으로 인해 경륜·경정사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환급률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륜·경정법 개정을 검토하는 경우 기존 수익금 배분비율의 재조정에 대한 이해관련 단체 및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정추진 중인 통합복권법(가칭)과도 연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청소년육성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방안 관련

1) 청소년육성기금을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일탈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답 변)

○ 그동안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기조가 주로 자금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현재 3000억 원이 넘는 중대형 기금으로 발전하였지만, 전입금보다 사업비 집행 비율이 적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사업비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문화 예술에 대한 청소년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예술 사업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보호 및 일탈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기금을 이용하여 순수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체의 효율적인 발전과 관광외화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1973년도에 설치되어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민간부문 관광인프라 확충과 국내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03년도에는 민간부문 관광시설 확충 등 용자사업 2150억 원,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사업 등에 22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문화예술계 지원은 기금 설치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설 국악공연 상품화, 문화관광축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관광체험 등 문화예술을 지역 관광상품화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2004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순수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요지)

4. 문예진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1) 국가정책을 민간자율기구에 맡긴다는 명분하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답 변)

<지역별 문예진흥위원회 구성 관련>

○ 우리 부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문화예술분야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현장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예술적, 심미적 가치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의사결정에 문화관광부 공무원이나 문예진흥원의 직원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결정되어질 수 없는 것이나, 순수 예술진흥분야의 지원에 관해서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olicy)에 따라 정치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국가의 판단이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영국, 미국 등 문화선진국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 아울러 지역문예진흥위원회 구성은 우선 우리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과 특성 및 재정상황, 시급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의 위원회로 전환 관련>

○ 문화산업 관련 민간위원회 구성과 권한이양은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으며, 향후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든 현재의 정책시스템을 보완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으므로 투명한 지원절차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의요지)

2)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문화원,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업무분산을 초래하거나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 변)

○ 당초 문화관광부 소속이었던 재외문화원 10개 처는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LA·뉴욕·파리·동경 등 4개 문화원은 문화부 관장으로 있고, 독일·중국·러시아·미국·캐나다·오사카 등 6개 문화원은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에 소속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는 세계 주요 거점지역에 20개소(주재원 55명)가, KOTRA 해외지사는 73개국에 99처(주재원 306명)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소속 문화원은 문화교류·협력 지원, 한국문화 종합소개 거점 기능, 문화산업(영화, 드라마, 게임 등) 해외진출 지원, 재외동포 대상 문화홍보 등 한국문화 종합소개 전략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이고, 국정홍보처 소속 문화홍보원도 외관상 해외언론대응의 국정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는 있으나 도서관, 영사실, 한국어 강좌 운영 등 사실상 업무의 상당부분이 문화, 관광,

스포츠지원 등 문화관광부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해외홍보체계의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해외홍보가 언어, 예술, 방송 등과 같은 문화홍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확대와 우리문화 해외소개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홍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 소속 4개 문화원과 국정홍보처 소속 6개 문화홍보원의 기능 및 구조 재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상기의 기초하에 현재 우리부 재외문화원,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등 해외홍보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해외문화홍보체계 정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요지)

5. 스크린쿼터제 관련

1) 스크린쿼터제도는 관객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제도가 아니고 관객에게 폭을 넓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스크린쿼터제도가 관객에게 영화관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국영화는 최근 5년간 스크린쿼터제도를 기반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영화관람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고 봅니다.

○ 이는 최근 5년간 매년 1인당 영화 관람회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 관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영화 1인당 관람회수: 1998년 1.08회 → 2002년 2.21회 105% 증가
영화 관객 수: 1998년 50백만 명 → 2002년 105백만 명 110% 증가

(질의요지)

2) 우리나라의 영화 현실이 미국에 비해 왜소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하면, 결국

국내 영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스크린쿼터제도는 한국영화 상영기회 확보 → 영화제작 활성화 →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선순환 구조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스크린쿼터제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현행 영화제작·배급·상영 체계는 스크린쿼터가 축소 내지는 폐지된다면 위원님이 예측하신 대로 한국영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요지)

3) 스크린쿼터의 폐지나 축소로 인한 영화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한 분야의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고유한 정서와 정신의 붕괴며, 21세기 중심산업의 붕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도는 세계 영화시장을 80% 이상 점유하는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제적으로 문화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스크린쿼터제도는 방송·게임·음반·비디오·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관련분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미래핵심 문화산업인 영화산업을 지켜주는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로 인한 한국 영화산업의 붕괴는 우리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21세기 핵심 산업인 영화산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6.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 관련

1)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과 숙박문제 관련, 지난 5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별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IOC 집행위원회의 반응

(답 변)

○ IOC 조사평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국제스키연맹(FIS)의 실사확인서와 함께 IOC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IOC로부터 동 보

완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OC 집행위원회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제한 시간 15분 관계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IOC에 제출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봉경기장 건설은 가능하지만 위험요소가 따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 평창이 이미 Bid file과 지난 2월에 평가위원회의 평창방문 시 적시하였듯이 중봉다운힐 경기장의 건설 계획은 FIS 전문가의 현지실사에 의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FIS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평창은 IOC평가위원회의 현지 방문 시 평가위원회에 의해 개진된 의견을 존중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시 한번 FIS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역시 이미 지난 4월 14일에 IOC에 통보한 바 있다. FIS는 검토의견에서 중봉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적, 공간적, 환경적 측면의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봉경기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 평창이 Bid file과 현지실사 시 IOC에게 제시한 Down hill 경기장의 건설비는 레이아웃 단계에서 한국의 설계방식, 물가, 임금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낮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평창은 IOC와 FIS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건설비를 산출할 것이다. 만약 건설비가 증가할 경우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강원도 지방정부는 정부보증의 관행에 따라 증가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도 기 제출된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각각 50%씩 부담할 것이다.
- 강원도 지방정부는 경기장 건설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세계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조금의 차질도 없이 2007년 9월까지 완공할 것이다.
- 호텔객실의 부족과 숙박시설의 수준의 차이가 도전과제라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 평창이 이미 적시하였듯이 500실 규모의 5star급 특급호텔 2개의 신축에 대한 투자의 향서가 문화관광부에 제출되었으며, 평창에 위치한 드래곤밸리호텔의 소유주도 최근 강

- 원도지사와 기존 객실의 보수와는 별도로 400실 규모의 호텔 신축 계획에 합의하였다. 평창은 필요하다면 보증서를 제공할 것이다.
- 평창의 올림픽 숙박시설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콘도미니엄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콘도미니엄 객실의 30%가 호텔형태(studio)로 되어 있으며, 모든 콘도미니엄은 3스타급 호텔 이상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의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숙박시설의 주요 고객인 20~40대의 생활양식이 western style로 빠르게 바뀌어감에 따라 침대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식 온돌방이 서구식 침대방으로 빠른 속도로 개량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와 강원도 지방정부는 이러한 객실형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2010까지 평창이 제안한 객실 중 적어도 90%는 서구식으로 개선될 것이다.
 - 또한 평창이 속한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지난 해 6300만 명의 내국인과 1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였다.
 -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전망, 2005년까지의 기업들의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2009년까지의 서울~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완공은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 원주 지역의 관광수요를 폭증시킬 것이다. 이는 숙박시설의 공급증가와 시설의 고급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평창은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이미 2002년 한 해 동안 평창지역에 총 1000실 규모의 다양한 펜션들이 신축되었다.
 - 평창은 내국인 관람객의 상당수가 평창에서 현재 자동차로 2시간10분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수도인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의 거주자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은 아이스하키 경기가 개최될 원주에서는 자동차로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009년까지 서울~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원주 간은 50분, 서울~평창 간은 1시간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평창의 지리적 장점은 서울의 1만 4000실 규모의 초특급 호텔들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들에 대한 이용도 가능하게 하여 평창의 숙박능력의 실질적인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평창유치위원회의 보완대책에 대한 IOC의 답신(5월 19일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

- 중봉 다운힐 코스

2003년 4월 3일자로 보내 주신 중봉다운힐코스의 결승지점에 관련한 의견과 새로 평가된 계획 및 FIS 보고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예산이 과소평가되었다면 추가 지원한다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확인을 받았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숙박

IOC는 드래곤밸리호텔 사업자가 평창지역에 400실 규모의 신규 5스타호텔을 건축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 사업의 보증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청이 웨스턴스타일의 침대를 보유한 객실의 비율을 2010까지 최소 90%까지 올린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 IOC가 위 서신에서 숙박과 관련하여 요구한 보증서는 강원도지사와 용평리조트 대표 명의로 작성, 5월 27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요지)

2)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2일까지의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계획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개 후보도시는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수의 IOC 위원들이 투표당일 지지도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의 홍보 및 유치활동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봅니다.

○ 가장 큰 현안은 7월 2일 체코 프라하 IOC 총회에서 2010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투표 직전에 있을 프리젠테이션에서 평창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6월 21일 문화관광부장관과 유치위원장 등 대표단으로 참가할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리허설을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점검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다시 한 번 리허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다 완벽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프라하 현지에 도착한 후 전체적인 리허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또한, 막판 유치활동은 개최명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도성향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Dream

프로그램' 등 평창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분단국 개최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점, 아시아지역 동계스포츠 발전, 대륙별 순환개최 등 평창개최 명분을 집중 설득하는 한편, 북한과 장웅 IOC 위원의 평창 유치 적극지지 발언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7. 대구하계U대회 준비 관련

1) 남북한 대학생들이 함께 참가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성화봉송로를 재조정하여 전 세계인에게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대회 조직위원회는 그간 수차례의 학계, 문화계, 체육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화채화지 및 봉송로선정 자문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시·도 관계관 합동회의 등을 거친 결과,

○ 채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육 기관인 성균관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처음 열린 이태리 토리노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봉송은 8월 10일부터 11박 12일간 전국 16개 시·도를 U자 형태로 하는 봉송로를 거쳐 봉송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질의요지)

2) 대구U대회 입장권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입장권판매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구FC 시민주 공모, 지하철 참사 등 지역적 분위기로 인해 입장권판매 실적이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개·폐회식 입장권 본 티켓이 발행되는 오는 7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으로 판매에 나설 경우, 판매실적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넷 사용빈도가 많은 젊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집중홍보와 판매를 실시하고 일반 시·도민의 접근성이 좋은 대구은행 및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하고, 특히 출향인사, 지역기업체, 공공단체, 시민단체, 체육동호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역대학교 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방문판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7월부터 TV, 라디오, 신문 등 미디어

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범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이벤트행사, 홍보물 게첨·배포, 반상회 등을 통해 판매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며, 아울러 개최도시 시·군·구 및 교육청, 직능단체 등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예약·방문 판매하고, 지역백화점인 대구·동아·롯데백화점 경품으로 입장권을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 특히, 단체관람객 유치 및 개최도시별 대회 참관 관중의 책임 확보를 위한 동기 유발의 일환으로 개최도시별, 특별판매 창구를 설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초과 시 비용부분(40%)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60%)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학생단체관람 및 체육동호인, 직능단체, 사회봉사단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로 인한 침체된 지역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다시 뛰는 대구, 함께 하는 유니버시아드”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범 시·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구촌 젊은이들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전국 일선 세무관서장 회의 및 경찰지휘관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공무원 개혁 주체세력 형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공무원 개혁 주체세력 형성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공무원조직 내에 사조직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변화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질의요지)

2. KBS 역사스페셜 후속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문성근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방송프로그램 진행자 선정이라는 방송사 내부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3. 정책보좌관들이 민예총 출신의 진보적 인사

로서 어느 일방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우리 부에 임명된 2명의 정책보좌관이 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나, 공신력 있는 언론사(전남매일신문사)의 사장을 역임하거나 국회의원(이미경 의원) 보좌관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 또한, 정책보좌관 제도는 장관의 정책결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법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장관을 단순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식 계선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4.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경주·인천·울산·충남 등 미지정된 지역에 대한 문화부의 발전적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우리 부는 창업 초기에 있는 영세한 문화산업 관련업체들의 인큐베이팅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도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1개소씩 시설·장비비 설치 및 건축비로 국고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천 등 10개 지역은 국고 20억 원이 각각 지원되어 부천 등 7개 센터가 개소되어 지역 문화산업 관련업체에게 창업 지원, 공용장비 지원, 경영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천·청주·대전·청주·대구·부산(2001년 개소)/광주·제주(2003년 개소)/춘천·전주는 금년 중, 목포는 2005년 개소 예정

○ 우리 부는 2002년도에 경주시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인천, 울산, 충남, 경남지역에도 동 사업에 대한 추진의사를 문의(2002년 7월 공문)하였으나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이들 5개 지역에서 추진의사를 우리 부에 제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공 가능성 등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로또 수익금 문예진흥기금 조성 관련

1) 문광부는 4월 업무보고를 통해 타 기금 등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 변)

○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언급된 ‘여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의미하며, 200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일부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200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예산은 100억 원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예산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32억 원 등 137억 원으로 전년도 45억 원에 비해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의요지)

2) 2004년 사업비 부족액 217억원 국고반영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현재 입장

(답 변)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예정이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경륜·경정 사업수익금 등 여타 재원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실무자 간 협의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향후 문예진흥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 관계부처 내 갈등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

(답 변)

○ 국고지원, 로또복권 및 경륜·경정 사업수익금 활용 등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그리 쉽지 않겠지만,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제주 프로젝트 유치 관련(한국관광공사)

1) SCI사와 체결할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답 변)

○ 공사와 SCI사와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실정이며 계약 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약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사가 SCI사와 체결하려고 하는 토지매각 계약내역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4개부지, 중문랜드, 자연수련장 부지이며 총 매각 면적은 약 14만 6000평입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매각대상 부지 현황

시설구분	부 지 명	면 적(m ²)
숙박시설	관광호텔 2	84,310
	관광호텔 3	63,780
	관광호텔 4	63,790
	관광호텔 5	82,020
위.오락시설	중문랜드	167,841
	자연수련장	19,660
계		481,401 (145,624평)

○ 또한, 공개된 계약서(안)의 일부 내용은 토지매입의 조건으로 카지노 허가, 공사의 기본 계획을 초과하는 시설 설치, 이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서명 요구입니다.

(질의요지)

2) 일부 공개된 SCI사가 주장하는 용적률 500%, 높이 153m, 해안에서의 이격거리 30m 보장, 주차시설 자유건설 등의 계약조건에 대해 기존 입주업체와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 변)

○ 상기 사안은 공사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매입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으로 공사와 SCI사와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단지 내 입주업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와 SCI사가 상기의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특혜시비가 제기되어 일부 반발은 예상됩니다.

○ 이에 공사에서는 미화 30억불 직접투자유치, 고용창출,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광

객 유치 증대가 예상되는 금번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허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드릴 계획이며

○ 한편으로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사와 함께 제주도 및 관련기관 등과 협조하여 지역 발전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 만일 중문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며 용적률 등 기존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에 건의하여, 계획변경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업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SCI사에선 단지개발과 관련, 약 850억 원 가량이 소용되는 모든 기반 시설(오수,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의 경우 관광공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광공사의 입장

(답 변)

○ 우선 용적률 등의 변경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오수,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비는 원인을 제공한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중문단지 개발 이후 견지해 온 공사의 기본입장이며, SCI사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이에 SCI사에서는 자사의 부담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다만, 세금감면 기간의 연장을 통해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겠다고 수정 제의해 온 실정이며, 이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의요지)

4) 투자조건부인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서 향후 문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이에 따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조건 이전에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 변)

○ 작년 12월 3일 SCI사가 공사에 중문관광단지 입주신청 시 카지노 허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기존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년 2월 18일 입주적격자로 지정되었으며,

○ 3월 26일 SCI사는 기존계획 대신 카지노

허가를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어 공사에서는 5월 2일 ~ 3일간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제주도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 5월 29일 문화관광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화 5억불 이상의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5)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한 사업투자효과

(답 변)

○ 외자유치가 성공하여 약 9000실 규모의 레저 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미화 약 30억불에 이르는 외화가득 효과와 국제수준의 관광단지가 형성되며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관광객 유치 전략에 의거 약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예상됩니다.

※ 중문단지 특급호텔 고용실태: 1객실당 1.36명(카지노포함)

※ 9000실이 건설될 경우

- 연간 객실점유율 90%, 체재기간 4일, 1실 평균 관광객 수 1.75명 추정

○ 또한, 간접적으로는 제주도가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레저 목적 관광지로서의 국제적인 인지도가 상승할 뿐 아니라 국제수준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야간관광이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 창출, 숙박시설의 경쟁력 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요지)

3. 사립박물관 활성화 관련

1) 문광부가 마련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규정과 지자체와의 협의상태, 기획예산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문광부 입장

(답 변)

○ 현재까지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우리부가 마련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은 없습니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항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는 2004년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활성화 예산으로 30억 원을 신청

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개인소유 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고 성격상 맞지 않으며, 지원할 경우 지원범위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는 사립박물관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와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우리 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립박물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증문화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국립공주박물관 유물도난 관련

1) 박물관 보안시스템 운영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관행을 개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금년 10월 이전하는 공주박물관을 제외한 11개 박물관의 보안시스템을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어, 방재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 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박물관 자체적으로 방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방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각 박물관별로 2~3명씩 총 23명의 방범·방재 인원의 증원과 관련 경사비 확보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요지)

2) 현재 국립박물관의 유물관리 및 보안시스템 실태가 상당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국립박물관 전 직원에 대해 보안의식과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경찰서와 핫라인 개설, 경비 근무자에게 방범장비를 지급하는 등 유사시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우리 부 차원에서 2003. 5. 26~5. 30일까지 전문경비업체와 합동으로 전국 국립박물관에 대한 문화재 안전관리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박물관별 보안장치(전자Tag) 등 시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밀점검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문화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요지)

5.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은 「국민의정부」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02. 7.16)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 이 대책은 우리 부 소관 23개 과제를 포함하여 부처별로 세부과제를 발굴, 총 80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사항, 대통령지시사항,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등의 다른 실적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 소관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 중 대부분의 과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의 다른 국정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우리 문화 해외홍보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해 국가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6.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 추진상황과 전향적 방향의 남북체육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수준, 그리고 통일부, 국정원과의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진행 상황

(답 변)

○ 통일민족평화축전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당초에는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위 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측은 SARS 문제로 금강산 관광 등 방북을 전면 통제 한 후 “제7차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6월 27일부터 방북을 허용하였습니다.

○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 남북실무접촉은 6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제7차 이산가족상봉과 대구U대회 남북실무협의(6월 28일~30일 예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경 남북실무 접촉을 추진

하고, 대회개최는 9월 하순경 제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 부는 통일민족평화축전 개최를 계기로 각종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및 공동 입장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등 전향적인 방향에서 다양한 남북체육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 축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 국정원, KOC 등과 당면 현안문제와 대북실무접촉계획 등에 대하여 수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7. 캐릭터산업 육성 관련 대부분의 캐릭터 업체가 영세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성장가능성 잠식, 장기적인 안목의 마케팅 전략 및 인력 등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

(답 변)

○ 현재 우리 캐릭터산업은 본격적인 산업화단계로 진입하는 전환기로서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 가능성: 국내시장 5조 원 규모, 국산캐릭터 시장점유율 증가(1998년 10%→2002년 35%)
- 문제점: 업체의 영세성, 유통구조의 낙후, 산업정보·전문인력 부족 등

○ 문화관광부는 성장가능성을 잠식하는 캐릭터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캐릭터산업진흥 5개년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특허청(상표권, 의장권 보호 강화 * 2차례 공식회의),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 관세청(불법복제품 통관보류), 대검찰청(불법복제품 합동단속) 등

○ 이와 함께 캐릭터제품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과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해외진출 지원 예 :

△ Licensing 2003(LIMA SHOW) 등 해외 전시회 진출 지원 △ 캐릭터 현지어 버전 제작 지원 △ 캐릭터비즈니스 가이드북 제작

- 전문인력 양성 예 :

△ 캐릭터 프로듀서·마케터 양성('02년 국내교육과정 91명 중 15명이 캐릭터 분야로서 다수 차지) △ 캐릭터 비즈니스 과정 개설 추진 등

○ 정부는 캐릭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 다양한 지원을 통해 5년 후인 2007년에는 국내시

장 10조 원 규모의 캐릭터 강국으로 육성시키려는 정책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8. 게임투자조합의 게임시장 활성화 역할 및 효과, 중복투자에 대한 방지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의 게임업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책

(답 변)

○ 그동안 게임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웹젠, 엔텔리전트 등 유망 게임업체를 발굴, 지원하는 등

게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1호, 2호 게임전문투자조합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59%, 25%로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호 게임전문투자조합은 15%로 투자 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 투자설명회 상설화, 마케팅 등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등을 통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조합 운영현황

구 분	결성시기	규 모	문화부 출자금	투자실적	연도별 투자계획	계획대비 실 적	업무집행 조 합 원
제1호	2000. 12	150억원	50억원	88.7억원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	59%	한솔창업 투자
제2호	2001. 12	100억원	25억원	25억원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	25%	CJ창업투 자
제3호	2001. 12	100억원	25억원	15억원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	15%	한솔창업 투자
합 계		350억원	100억원	128.7억원			

○ 지금까지 중복투자는 없으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의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공간제공,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 핵심 게임기술 개발·보급,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9. 인터넷상 도박하우스 등 인터넷 도박 관련 해결방안

(답 변)

○ 인터넷, 게임포털사이트에서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의 매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와는 별도로 아이템 전문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버머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사이버머니 매매 그 자체는 현행

법상 불법이 아니며, 사이버머니 매매를 둘러싼 사기, 폭행,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사이버머니 매매를 둘러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아이템 매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하는 인터넷, 게임포털에 대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인터넷 도박의 경우 관련 부처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의뢰, 게임업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이버머니 매매 근절 캠페인 전개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李協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을 정부 내에서

원숙하게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 변)

○ 스크린쿼터 문제 관련,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법적 근거와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 합의와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2.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관련

1) 한일과거사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답 변)

○ 이번 한일 양국정상의 공동성명 내용 중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신사참배 문제로 중단되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절차를 다시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는 기본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6월 7일 한일 정상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실질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기본정서를 충분히 전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2)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교류에서 피해갈 수 있는지?

(답 변)

○ 특정국가에 대한 대중문화의 유입 제한은 정보화·세계화·국제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다만 한일 관계의 특성상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한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요지)

3) 대통령 방일 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추가 개방 스케줄

(답 변)

○ 일본으로부터 대중문화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으나, 2001년도 7월 개방중단 선언 이후 일본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 현재까지 추가개방 시기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문화예술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우리 부 자문기구인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

원회”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새 공주박물관의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유사시 문화재 관리대책

(답 변)

○ 신축 중인 공주박물관에는 옥내외 감시카메라(26대), 입체감지기(102개), 카드키 개폐시스템 등 거의 완벽한 방법설비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전시 및 비상사태 시 소장문화재는 지하 수장고에 수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후방 소산 및 군경 경비 요청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정부-언론 간 관계 개선 및 협력을 향한 새로운 방법과 의향

(답 변)

○ 정부와 언론은 각자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고유하고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가 보다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원님의 지적은 조언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일본 대중문화 개방 관련

1) 일본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수성을 띄고 있어 인적·문화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중문화 개방이 의제가 됐던 이번 대통령 방일 때 장관이나 문화예술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답 변)

○ 한일 양국관계가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대통령의 방일 시 문화부장관이나 문화예술계 인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한 점과 관련, 앞으로 대통령의 외국방문 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문광부가 심도 있게 검토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강

(답 변)

○ 이번에 밝히신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절차를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며, 추가개방 중단 이후 후속개방의 시기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요지)

3) 장관이 거론한 일본 대중문화의 기 개방 영향평가 결과 “충격이 미미하다”는 판단과 자신감의 근거 및 구체적인 자료

(답 변)

○ 3차까지의 개방결과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영향평가 결과와 자체평가 등에 의거해 답변드린 것으로 동 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4) 개방의 범위나 시기를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가 결정하는지 여부

(답 변)

○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부 자문기구로서 개방의 범위나 시기,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우리 부의 책임사항입니다.

(질의요지)

5) 추가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답 변)

○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문화예술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6)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며, 해당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그리고 향후 개방부문에 대한 양국 간 비교자료

(답 변)

○ 우리가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분야는 방송용 오락프로그램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물 등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공급 등을 통해 관련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양국 간 비교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분석」(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발행)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7) 일본 대중문화의 저급, 폭력, 선정성 등이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 내용규제의 강화 필요성

(답 변)

○ 일차적으로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상 공연추천, 수입추천, 등급분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물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작품은 여과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의 대중문화 및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에 미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 및 외주 전문채널 설립 관련

1)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부처 이기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관광부가 2003년 6월 4일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은 방송영상산업이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위성DMB, 데이터방송, 모바일방송 등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와 더불어 디지털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1998년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을 발표한 이후, 방송영상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온 결과 독립제작사의 창업이 크게 늘었고(1998년 113개사 → 2002년 319개사),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를 선도하면서 해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1998년 1천만\$ → 2002년 2천9백만\$)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국내 방송영상산업 환경은 다매체·다채널시대 폭증하는 영상 콘텐츠의 수요와 급변하는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아직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방송법 제92조에 따라 동 계획을 수립, 21세기 방송환경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지원 전략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처 이기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2) 5개년 계획의 발표와 관련, 방송위와의 협의 여부 및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 수립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답 변)

○ 우리 부가 2003년 6월 4일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법상 문화관광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업무를 장리한다.

※ 방송법 제92조제2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육성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문화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이번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 계획의 발표를 위한 실무협의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언론에 비춰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3) 외주전문채널의 구체적인 채널 확보 방안

(답 변)

○ 문화관광부는 현재 외주전문채널의 구체적인 채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외주전문 채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채널 확보방안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요지)

4) 외주전문채널의 운용재원 관련,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이 타당한 것인지?

(답 변)

○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서 외주전문 채널의 운용 재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 것은 외주전문 채널이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사항이고,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영상진흥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외주전문채널의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방송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 제2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질의요지)

5) 지상파방송으로 외주전문채널을 설립 시 방송의 저질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대한 견해

(답 변)

○ 현재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지상파로 할지, 케이블TV 또는 위성방송 PP채널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외주전문 채널이 지상파로 운영된다 고 가정하더라도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자체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그램 편성과 송출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비교적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으며, 제작원의 다양화가 가능해져 결국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6) 외주전문채널의 추진은 방송위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답 변)

○ 독립제작사·PP 등 방송제작사의 육성 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의 핵심적인 과제로, 방송법 제92조제2항에 의한 문화관광부의 소관사항입니다.

○ 외주전문채널 설립은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및 유통시장 창출을 통한 방송 프로덕션의 진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방송위원회 소관이므로 설립과정에서 방송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東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선진화된 국가들의 안전관리능력을 정밀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답 변)

○ 우리 부는 향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선진 외국의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대구U대회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과 지하철 사고를 당한 대구의 도시 이미지 회복 방안

(답 변)

○ 세계 170개국에서 1만여 명의 미래 주역들이 참가하는 대구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하철 참사로 실추된 대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구가 국제도시·패션도시·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 D-50일(7월 5일), D-30일(7월 22일) 등 계기별로 다양한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U대회 참가국 서포터즈 구성, U대회 응원 경연대회, U대회 관련 TV특집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주민들의 U대회 경기관람 캠페인을 유도하고, 각종 체육·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U대회 참여운동을 권장하여 U대회가 명실공히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3. 문화부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도 점진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속기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기관별로 획기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소속기관에 대한 정

보체제 계획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4. “호텔 외국인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폐지될 경우 관광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답 변)

○ 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는 당초 부가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호텔이 호화사치업종이라는 인식하에 폐지된 후(1991. 6. 30), 1994 한국 방문의 해 및 2002 월드컵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오는 6월 30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가세 영세율 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사스(SARS)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부는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핵심기반 시설인 호텔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가세 영세율이 2003년 12월 말까지 지속 적용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할 경우 부가세 징수분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일선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언급한 ‘공무원 개혁 주체세력 형성’에 대한 견해

(답 변)

○ ‘공무원 개혁 주체세력 형성’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공무원조직 내에 사조직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변화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질의요지)

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문화부 소관인지, 방송위원회와 협의한 사례가 있는지?

(답 변)

○ 문화관광부가 2003.6.4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법상 문

화관광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업무를 장리한다.

※ 방송법 제92조제2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육성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문화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이번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 계획의 발표를 위한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언론에 비춰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등 관련된 기관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3. 월드컵회장사업 관련 피해업체에 대하여 월드컵 잉여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

(답 변)

○ 우선 코오롱TNS월드와 OEM업체 간의 계약은 상업적 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조직위가 코오롱TNS월드를 FIFA마케팅대행사에 추천할 때 잘못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OEM업체에서 조직위를 고발한 상태이므로 조직위원회가 월드컵잉여금으로 OEM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원관리하에 있는 월드컵 물품을 구매를 통한 간접지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작년 말 1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말 해산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조직위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구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다른 대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요지)

4. 스크린쿼터 관련, 경제부처의 이야기대로 유무형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한 논리

(답 변)

○ 우리 부는 스크린쿼터 제도가 한미투자협정에서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 스크린쿼터의 가치를 40억불 투자유치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쿼터는 세계영화시장을 80% 이상 점유하는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우리 문화 정체성을 지키고 국제적으로 문화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스크린쿼터제도는 방송·게임·음반·비디오·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관련분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미래핵심 문화산업인 영화산업을 지켜 주는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의 문화산업 업체들은 문화산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미국경제에 공헌한 바 크고, 향후 우주항공산업의 가치를 능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스크린쿼터의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경제부처와 경제계에 설득, 스크린쿼터제가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의요지)

5. 포스트월드컵 관련 대책

(답 변)

○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은 ‘국민의정부’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2002. 7.16)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 이 대책은 우리 부 소관 23개 과제를 포함하여 부처별로 세부과제를 발굴, 총 80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사항, 대통령지시사항,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등의 다른 실적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 소관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 중 대부분의 과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의 다른 국정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우

리 문화 해외홍보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해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6. 파리소재 ‘가나보브르 화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활용 방안

(답 변)

○ ‘가나아트갤러리’가 파리 마레지구 화랑가 건물을 임대하여 1995년 1월부터 운영해 오던 ‘가나보부르 화랑’이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폐쇄 위기에 놓여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한국미술의 세계화와 국제무대 진출에 있어서 파리의 중요성을 감안, 이 화랑을 정부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가나보브르 화랑 개요

- 전시공간: 2층건물(넓이:13m×8m)
- 운영실적: 연간 7~8회 개인 및 그룹전, 공연·퍼포먼스 등 부대행사
- 대관료: 월 3만유로(약 4000만 원)

○ 문화관광부는 현재 주불문화원을 통한 현지 여건 확인,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타 문화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 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대로 기획예산처 등과 예산확보 방안도 아울러 협의할 예정인바, 이 화랑이 한국작가 세계 무대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金秉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사용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

(답 변)

○ 북한문화재 지원은 고분 벽화 등 세계적 유산가치가 있는 북한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한 문화재교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기금이 용도대로 문화재 보존비용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기금을 집

행 중에 있어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유네스코 및 외교부 등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개략적인 사용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며, 주요사용내역은 벽화 고분 보존을 위한 장비구입비, 전문가 조사비용 등입니다

○ 기금이 사용되는 경우 유네스코에서 보고서로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공식적인 통보를 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으므로 향후 통보받는 대로 정확한 사용내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환수국을 설치하여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답 변)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화재환수국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나 조직의 문제는 문화재청의 의지만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로서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문화재청 위상 강화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결과 동산문화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재 해외 환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해외 유출문화재는 유출경위가 불분명하고 규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장국의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황과악에 주력하고 기증, 국제경매시장에서의 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협의, 소장국의 우수한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成鎬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문화재 보호 대책

(답 변)

○ 자연재해로 인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사전점검과 문화재 주변환경정비 등 예방적 문화재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우리 청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평소 문화재의 점검실태조사와 보수·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태풍 등 기상특보발령 즉시 우리 청 및 각 시·도(시·군·구)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수시 점검·순찰을 강화하는 등 문화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예방점검 및 환경정비,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미리 잠정적인 국고보조예산을 통지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의견을 같이하며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가내시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및 그 주변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석축, 배수로, 지지대, 경사면 정비 등 문화재 보존·보호시설 및 환경정비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재해예방을 하고자 2004년 예산 신청지침에도 이를 반영,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문화재를 집중관리하고 문화재지역 사전점검강화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자연재해 피해예방과 피해발생 시 조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2.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소장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답 변)

○ 비지정문화재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넓고 수량도 많으며 소유자가 도난 등을 우려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현황과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부분 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문화재의 관리강화를 위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시행(2001. 7. 1)하고 있으며

○ 관리나 보안시설이 취약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소장문화재에 대해 국공립박물관으로 기증 및 기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 유네스코에서 도난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및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권장하고 있는 '소장유물 현황표'를 제작 보급하여 개인 소장자도 소장유

물에 대한 상세자료를 비치함으로써 도난 등에 대비토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증문화재에 대한 전시공간의 마련과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분위기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문화재는 개인의 골동품적인 소장보다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국민적인 재산이라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辛基南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청의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

(답 변)

○ 먼저 문화재청의 승격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을 위해 그간 관련부처 및 행정자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해 왔으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정부부처 간 기능조정 및 지방분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우선 문화재의 보존·활용에 필요한 일부기구 및 인력보장을 위한 직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문화재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협의 등 행정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일부조직 개편만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문화재청 승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2.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대학원과정 및 연수원 미설치로 전문인력의 배출이 어려운데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계획

(답 변)

○ 문화재 및 전통문화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과,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학원과정 및 전통문화연수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학원 과정은 사회적 수요, 줄

업생의 진로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현행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대학원 설치’ 불가

○ 전통문화연수과정의 설치에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상에 규정되어 있으나, 전담인력과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예산과 인력을 확보코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개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담운영인력 4명, 연수시설 건립 소요예산 52억 원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 반출 및 도굴 등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의 처벌규정을 강하게 개정할 용의

(답 변)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절취, 은닉 등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장문화재를 도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형법상 절도범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손괴 또는 은닉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 범규에 비해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는 “본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그 위반물품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의 장물성도 상실된다.”는 대법원판결(1987.10.13, 선고 87도 538)에 따라 공소시효가 경과된 불법문화재 유통에 대해 처벌을 못 하였으나 본법의 행위가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법문화재 은닉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이 2003.7.1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이 시행되면 불법문화재 유통근절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보호법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보안장치 마련 및 예산지원 명시조항 여부

(답 변)

○ 문화재보호법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5항에 의하면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항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개인소장 문화재가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이 관리주체를 변경한 사례와 이러한 조사의 시행여부

(답 변)

○ 개인소장 지정동산문화재는 소장자 책임하에 자택 또는 위탁(공공박물관·은행금고 등)을 통해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 부적정으로 개인소장문화재의 관리 주체를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한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변경 등의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선임의 기본원칙, 향후 위원들의 활용방안

(답 변)

○ 이번 문화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문화재 보존관리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문화재위원의 고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선임 원칙은

첫째, 문화재 관련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현 위원을 대폭 교체, 총 86명 중 62명을 신규로 위촉하였고,

둘째,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소관부

과위원회와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인사의 참여와 지역인사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위원 위촉의 최우선 고려사항인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인사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이 부분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새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유념하여 문화재위원회가 논쟁의 무대가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질의요지)

2. 제주지역 문화유산 관련

2-1. 지난 유네스코 방문단의 답사내용과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등록상 문제 여부, 향후 등록 추진계획

(답 변)

○ 제주도세계자연유산지구가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등록추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유네스코 자연유산책임자인 이시와란 박사와 호주의 동굴연구 권위자인 미틀턴 박사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우리 청이 공동으로 초청 제주도 신청대상지역을 2003. 5. 14 ~ 5. 15까지 답사하였습니다.

○ 답사결과 제주도 한라산과 동북사면의 동굴, 오름 등은 세계자연유산 등록기준 4가지 중 지질학적·지형학적 분야와 뛰어난 경관분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 식물 및 동굴분야 국제전문가의 현지조사와 10월경에 심포지엄을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학술조사가 끝나면 내년 2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2005년 2월 이전 유네스코에서 현지조사·평가를 거쳐 6월에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질의요지)

2-2. 국회나 시민단체에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할 사항

(답 변)

○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 시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제주도민 및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만 등록가치 조사 시 그 의견이 반영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0월 개최예정인 국제심포지엄에 시민단체를 적극 초청 이해 및 지지를 구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3. 해외소재문화재 관련

3-1. 해외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양한 인재풀로 조사팀을 구성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

3-2. 실태조사가 향후 문화재 환수자료로의 활용가치 여부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환수방침

3-3. 소장국 반환의사가 없을 시 소송 등의 방법으로도 반환이 어려운 현실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입장

(답 변)

○ 해외 유출문화재는 약탈 또는 불법반출 등 정확한 유출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소장국의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에 우리 청에서는 영국 런던박물관 등 외국의 중요 소장처를 대상으로 유출문화재 조사 10개년(2002~2011) 계획을 수립,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조사 시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조사사업의 실효성을 기하는 한편, 이들 조사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해외문화재 환수 및 민간단체의 구입, 기증 등을 통한 환수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반환이 불가능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 박물관내 한국실(현재 미국 등 17개국 51개소) 전시를 통하여 우리문화의 홍보자료로 활용되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4. 북한 문화유적 훼손 관련

4-1 개성지역 문화재보존을 위해 개성공단협의회에 참여한 활동내용

(답 변)

○ 문화재청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개성공단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문서 협의(2000.10.10)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문화재기획국장을 위원으로 추천·통보(2000.10.11) 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개최한 동 협의회에 참석(2000.10.13)하였으며,

○ 동 회의에서 문화재청은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와 관련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측량조사 시 남한 측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회의 후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 등의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에 통보(2000.10.18)한 바 있습니다.

(질의요지)

4-2. ‘북한문화재 보존 장기계획’의 공개 용의와 공개 가능한 계획의 내용

(답 변)

○ 동 장기계획은 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지원에 따른 것으로 2002~2006 사업기간 동안 유네스코의 협력하에 약수리 고분 보존 및 북한 문화보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비, 집행방법, 사업활동, 사업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제출 등 동 사업이행을 위한 남북한 협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 동 협정내용에는 약수리 고분 환경의 과학적 조사, 보존작업, 장기보존을 위한 훈련 워크숍 프로그램의 방향과 필요성이 제시됐고 약수리고분의 보존상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5. 전적문화재 DB사업 관련 개인소장자들의 공개기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 및 향후 계획

(답 변)

○ 중요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은 기록문화유산인 전적문화재가 도난,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멸실되었을 경우 원형 복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429건의 국가지정 전적문화재를 대상으로 디지털촬영 및 컴퓨터 이미지구축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입니다.

○ 2002년 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은 국가 또는 대학박물관 소장품이 15건, 개인소장(사립박물관 포함) 15건 등 모두 30건의 문화재를 추진하였습니다.

○ 당초 사업의 목적이 문화재의 기록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됨으로써 소장자들의 협조를 어

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으나 가공된 자료의 활용과 대외공개라는 측면에서는 소장자들의 공개기피 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구축된 자료 중 소장자가 동의한 문화재에 대하여서만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국민 및 관심 있는 학자들이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공개를 기피하는 소장자에 대하여서는 사업목적의 공공성과 민족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하여 성공리에 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이 완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6. 서해 비안도 해저유물 관련

6-1. 새만금사업이 지표조사 의무화 이전에 추진되었다고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답 변)

○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되기(1999. 7. 1) 이전인 1991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추진되었으므로 현 상태에서 지표조사의 소급적용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조제 공사 이후 간척지 내부개발 사업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6-2. 비안도 해저유물 발굴작업의 경과·성과·계획

(답 변)

○ 비안도 해저유물은 2002년 4월 민간 잠수사가 어로작업 중 청자 243점을 인양,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로 처음 알려졌고, 수중문화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긴급 탐사를 거쳐 동 지역 일대를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유적의 보존대책 수립 및 학술자료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4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출토유물은 현재까지 발견신고유물 및 발굴작업을 통해 총 3172점을 인양하였습니다. 유물은 보존처리과정을 거쳐 국가 귀속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 신고 유물: 243점

- 긴급 탐사: 211점

- 1~4차 발굴: 2718점

○ 향후발굴 계획

2003년 4차 조사 결과, 새로운 유물매장처가 발견되어 추가 발굴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질의요지)

6-3. 새만금사업 지속에 대한 환경과 경제적인 시각의 공동논의 창구 마련 필요성에 대한 입장

(답 변)

○ 문화재청에서는 새만금사업 지속에 대한 공동논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농림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7. 문화재 훼손 관련

7-1. 경북 의성 관덕동삼층석탑의 훼손 경위 및 훼손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답 변)

< 석탑 훼손 경위 및 훼손 원인 조사결과 >

○ 보물 제188호로 지정된 의성 관덕동삼층석탑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하여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2003.4.26)를 하였으며, 훼손사실 접수 후 관계 문화재전문위원 및 문화재청 관계자가 현장조사(2003.4.28)를 실시한 결과

- 훼손 원인 및 경위는 도굴시도에 의한 것으로서
- 도굴범들은 파이프, 버팀목 등을 이용하여 노반석을 내리고, 이어 3층 옥개석과 3층 탑신석, 2층 옥개석을 내려놓고 1층 옥개부분을 옆으로 밀어내어 사리공을 확인·도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리공 안에 부장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답 복원 등 조치사항>

○ 문화재청에서는 훼손 신고 접수 후 우선 공사 실시에 앞서 석조관계전문가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관계자를 긴급히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2003.4.28)하였으며,

○ 탈락된 석재를 수습하여 일차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탈락된 부위에 대한 접착 등 보존처리를 실시(2003.5.6~5.7)하였으며, 보존처리 완료 이후 관계전문가의 지도 및 자문하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2003.5.12)

(질의요지)

7-2. 경북 군위 인각사 극락전 훼손과 관련, 문화재청 및 지자체가 수리·복원에 노력한 이유와 처리방침

(답 변)

○ 인각사 극락전은 조선 숙종 때 지어진 건물로 현재까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찰측에서는 지붕에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건물이 노후하여 전면 해체보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각사는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역사적인 장소로서 현재 인각사지 기본정비계획('03.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의거 극락전 건물하부를 비롯한 경내·외의 발굴조사를 통해 본래 인각사지의 사역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 단계에서 극락전에 대한 전면 해체보수(개축)보다는 당시의 사역 확보를 위한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전의 위치와 방향 등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역사적 장소로서의 인각사의 의미를 살리고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인각사지 기본정비계획과도 부합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경북도(군위군)와 인각사측에서 2003.6.25,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발굴범위, 현 건물(극락전, 강설루 등)의 해체 및 재건축 등 향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극락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동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및 극락전 해체보수 등 인각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양시킬 있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8. 소래철교의 문화재 등록 여부

(답 변)

○ 소래철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가치가 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지난 4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문화재 등록예고를 한 바 있으며

○ 현재 철도청과 인천시(남동구청) 사이에 재산이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보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李協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 보안관리 대책

1-1. 문화재 보관시설의 보안상태 점검여부와 국보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1-2. 국보에 대해 소유자나 관리단체 현황 외에 관리실태 자료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1-3. 국립박물관보다 보안상태가 부실한 사찰과 개인소유 국보가 도난 위험성이 클 것이라는 데 대한 견해

1-4. 사찰과 개인소유 국보에 대해 관리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게 하는 이유와 보안 시스템 지원 및 관리단체 지정 등 방법보안 계획

(답 변)

○ 우리 청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 사건 발생을 계기로 우리 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유물관리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학박물관, 공·사립박물관, 지자체 관할 유물 소장시설에 대해서는 “방법시설 및 방화설비 점검표”에 의거 해당사항을 점검,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관리시설과 인원이 취약한 서원, 문중 3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청 기술직, 연구직을 포함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003.6.9~6.14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옥산서원 등 4개소(서원 1, 문중 3)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 감시카메라 등 첨단 도난경보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와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찰, 개인소장 문화재 등 취약 보관처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의 확보 지원을 통해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현재 소유자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유문화재를 제외한 사설박물관, 미술관, 사찰, 개인의 경우 소장처에서 직접 보관을 원함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청에서는 매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문화재에 대한 보수지원, 보관시설이 양호한 국공립기관 위탁보관 유도, 도난경보시설 지원 등 동산문화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기금 설립 관련

2-1. 기금 설립이 아직 내부검토 중인데 언제 설립이 가능한지와 진척 정도

(답 변)

○ 예산제도상의 한계로 법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 등을 적기에 보존하기 위하여는 예산과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보존기금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보존기금의 조성재원과 활용 방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이를 기초로 국내외 사례검토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기금설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질의요지)

2-2. 문예진흥원의 기금확보 노력에 대한 의견과 문화재청이 기금설립을 위해 해 온 노력과 앞으로의 각오와 의지

(답 변)

○ 2004년 1월부터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재원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족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경륜·경정 수입금, 로또 수익금 등의 일부 재원을 문예진흥기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대안 모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통합복권법’ 제정 시 로또 수익금 등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금의 축소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보존을 위한 재원확충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필요성이 높은 만큼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3. NGO단체 및 문화재명예관리인 지원대책

(답 변)

○ 우리 청에서는 고궁 관람객에 대한 문화재

설명 및 안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 지원(강사료, 홍보비 등)을 위해 한국의 재발견(우리공필지킴이) 및 한국청년연합회(우리공필길라잡이)에 매년 2000만 원과 조난 조수류의 구조·치료·재활훈련·방사, 밀렵감시, 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조류협회에 매년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4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보전활동 및 생태교육사업 등에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자기고장의 문화재를 ‘알고, 가꾸고, 지키는’ 한편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선정·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명예관리인에 대해서는 1997년도부터 매년 명예관리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명예관리인의 선정·포상 및 문화유적 답사, 중요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요지)

4. 문화재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답 변)

○ 문화재 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한 검·경의 수사력 보강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 검찰에는 문화재전담검사 1명, 경찰청은 조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마약 사범 전담반과 같이 문화재사범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현재 검·경찰 수사기관과 324명의 시·도 사법경찰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밀반출 예방을 위해 전국의 14개 공항,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여 ‘비문화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선 취항수가 증가된 비상근 대구국제공항 문화재 감정관실의 경우 2003년 5월부터 상근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노선 취항수를 고려하여 문화재감정관실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는 등 문화재 해외 밀반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鄭東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문화재 강탈 범죄에 대비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계획

(답 변)

○ 우리 청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 사건 발생을 계기로 우리 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유물관리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학박물관, 공사립박물관, 지자체 관할 유물 소장시설에 대해서는 “방법시설 및 방화설비 점검표”에 의거 해당사항을 점검,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관리시설과 인원이 취약한 서원, 문중 3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청 기술직, 연구직을 포함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003.6.9~6.14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옥산서원 등 4개소(서원 1, 문중 3)에 대해서는 금년도중 감시카메라 등 첨단 도난경보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와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매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훼손문화재에 대한 보수지원, 보관시설이 양호한 국공립기관 위탁보관 유도, 도난경보시설 지원 등 동산문화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문화재 도난예방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 변)

○ 문화재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넓고 수량도 많아 도난, 도굴 등 감시인력이 부족한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따라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문화재사범 신고 유도 및 문화재 애호정신 고취 등 홍보강화 실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반상회보 게재, 국정홍보처의 옥외전광판 광고 실시
- 문화재 도난사건 발생 시 전국 문화재매매업체(822개소)와의 유기적인 협조 강화로 불법 문화재 거래 시 우리 청 신고 등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 각 지역의 문화재명예관리인(5700여 명)과 시·도에서 위촉한 문화유산해설사 등을 문화재 관리요원으로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

는 등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소장자의 동의를 위한 설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답 변)

○ 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의 활용을 위한 대외공개(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부 소장자가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소장자가 동의한 대상자료에 한해 우선적으로 우리 청 홈페이지에 원문을 공개(30건 중 25건)하고 있으며 2003년도 구축 대상(50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소장자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기록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사업목적의 공공성에 대해 홍보함과 동시에 개인 소장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구축된 자료가 효율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헤이그협약 및 유니드로와의 협약의 조속한 가입에 대한 견해

(답 변)

○ 1954년 인류의 문화유산인 각국의 문화재를 무력 전쟁 시의 파괴행위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된 헤이그협약은 현재 103개국(2003.1)이 가입하고 있고 1995년 반입국의 참가유도를 위하여 도난·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 원칙과 선의 취득자 보호개념을 조화하여 제정된 유니드로와의 협약은 현재 18개국(2003.1)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이들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 2001년 가입검토의견을 외교통상부에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헤이그협약의 경우 공동방위체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약 가입을 위한 제반사항 마련 및 협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즉각적인 가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니드로와 협약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의 최종 협약가입 추진결정 및 동협약의 가입으로 인한 국내 이행입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

의 의견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상기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향후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제반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高興吉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 정 책보좌관, 주니어보드, 개혁주체세력 등에 관한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만족도 조사(5.6~25, TNS)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처 여론조사는 가능한 한 각 부처의 정책이나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국정현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 대통령 방미 계기로 실시한 미국 신문광고와 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와 지출세목, 향후 계획 및 광고의 효과 유무, 국가이미지 광고를 기업인들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광고는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관련, 해외홍보원 예산에 편성된 '해외미디어 활용 국가이미지 광고-신문광고'(3억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 동 광고는 당시 반미감정과 미국의 對韓 불신감정으로 약화된 한미 간 신뢰관계와 동맹의식을 회복하는 한편 미국 내 여론 주도층에게 참여정부의 외교·경제정책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행되었으며, 향후 신문광고 계획은 없습니다.

○ 광고효과 조사(구독자 대상, 제일기획 미국법인 실시) 결과,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인상을 심고 한국이 미국의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메시지를 AP, 독일 Handelsblatt 등의 주요외신에서 인용 보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배가시킨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아울러 日 경단련(경제단체인연합회)도 워싱턴에 광고센터를 두고 국가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인들도 이라크전으로 인한 獨·美 갈등 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 광고를 낸 적이 있음(2003. 2월)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秉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는 한국 오류 시정 관련 금년도 대외홍보 예산 7억 4000만 원의 사용내역과 외국 교과서의 한국 왜곡 실태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4000만 원은 정부 대표 영문홈페이지 korea.net의 운영예산으로, 이 중 인터넷 오류시정 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 우리 처는 동 예산을 통해 인터넷상의 한국 오류 정보를 적극 시정해 나가는 한편 오류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를 위해 korea.net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과서 오류시정의 경우, ‘국가이미지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국 교과서 기초조사 및 시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각 국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수집: 2003. 1월 ~ 총 56개국
- 보고서 작성: 2003.6~10월
- 시정자료 개발: 2003.11~12월

○ 위원님 말씀에 유념,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오류시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는 17개 부처 대상 실시 예정인 브리핑 교육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브리핑 교육은 우리 처에 교육을 요청해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선진국의 브리핑제도 운영, 브리핑제의 의의 및 방법, 요령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요지)

3. 위원님께서는 각 부처 공보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적 식견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홍보처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공보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 식견을 높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처도 개방형 브리핑제의 성공은 내실 있는 브리핑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제 특강과 전문 교육, 매뉴얼 보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4. 위원님께서는 통일부가 가관신문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불임과 같이 “사실이 아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 임]

<한나라당 김병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 “통일부가 국내언론의 가관 내용을 북측에 제공하고 있다”는 질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다만 2000년 8월 남북언론사 사장단 방북 시(8.5~12) 쌍방 언론사 간 출판물 상호교환 합의에 따라 2000. 10. 2부터 10. 5까지 3일간 (10.2/10.4/10/5)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 우리 측 중앙일간지 14종(경제지 4종 포함) 각 5부, 도합 70부와 북측 노동신문 35부를 상호 교환했던 사실이 있었음.

○ 2000년 10월 6일 이후 북한 측이 판문점을 통한 상호 신문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래(구체적인 사유 불제시) 현재(03.6)까지 우리 측이 북측에 일간지를 제공한 적이 없음.

(李允盛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임시직 인건비 예산 편법전용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1999년 5월 우리 처 발족 당시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정원이 대폭 감축(205명→118명)되어, KTV 방송운영에 필요한 조감독·기자·아

나운서 등 방송제작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 그동안 KTV는 부득이하게 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직을 고용, 방송제작 인력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 위원님께 넓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체 인력운용 효율화를 통해 임시직 인원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2001년(66명) → 2002년(56명) → 2003년 6월(50명)

○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 방송의 정상적인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임시 고용인력을 정규직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서는 KTV를 인터넷 전문방송으로 개혁하는 방안과 인터넷상 실시간 방송을 강화하면 굳이 별도의 채널 운용이 필요한지 여부와 함께 시청률 저하문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KTV가 대국민 서비스 홍보에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참여 및 여론수렴 프로그램 확대, 국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 KTV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KTV를 케이블·위성·인터넷 방송으로 채널을 다변화한 것은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매체 운용으로 콘텐츠 다양화,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 확대 등 정부정책 홍보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는 우리나라 방송채널의 보편적 추세입니다.

- 케이블방송: 메인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정·공공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 확대
- 위성방송: 중계 가능한 국회의사활동 전량을 생중계 방송하여 국회방송 중심으로 차별화
- 인터넷방송: KTV 실시간 방송,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VOD) 서비스, 정부기록 영상물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토론방 개설,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등 시청자 의견을 적극 수렴, 제2의 액세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KTV 시청률은 80여 개 케이블 채널 중 30위권 내외로 중상위권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청률 조사는 조사대상어 일반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KTV의 주시청 장소가 관공서, 사무실 등 공공장소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시청률은 이보다 다소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KTV는 시청률 제고를 위하여 본방송 비율의 확대, 문화·교양·다큐 등 연성 프로그램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TV가 대국민 서비스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립니다.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3. 위원님께서서는 개방형 기자실을 운영중인 단독부처(5개) 현장기자 대상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개방형 기자실 도입에 대해 지난 3월 언론재단이 전국 신문방송통신기자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자실 개방에 58.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방형 기자실 도입과 관련해 우리 처는 기본계획 확정(5.27) 전에 언론계, 출입기자단 대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 현장 기자대상 여론조사 실시 문제는 아직 새 제도 도입 초창기인 관계로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대통령 방일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여론조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대통령 MBC 100분 토론 관련, 설문이 바뀐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대통령 방미의 경우에는 한미 관계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안으로서 대통령 방미 전후를 통해 국민들의 대미인식 변화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사전에 여론조사를 기획 추진한 바 있습니다.

○ 대통령 방일의 경우에는 평화·번영과 북핵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양국의 이해가 합치되어 별도의 여론조사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서는 국내언론 및 해외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이 바뀐 사유는 조사업체(엠비존)가 처음 제안한 설문안을 수정하여 조사했으나, 인터넷에는 조사업체가 처음 제안한 설문을 잘못 올려 바로 잡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업무상 착오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서는 공무원의 ‘개혁주체세력화’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공무원의 ‘개혁주체세력화’ 관련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처 여론조사는 가능한 한 각 부처의 정부 정책이나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국정현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3. 위원님께서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프로그램 제작요원을 임시직으로 고용하면서 예산을 편법운용한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1999년 5월 우리 처 발족 당시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정원이 대폭 감축(205명 → 118명)되어, KTV 방송운영에 필요한 조감독·기자·아나운서 등 방송제작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 그동안 KTV는 부득이하게 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직을 고용, 방송제작 인력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 위원님께 넓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체 인력운용 효율화를 통해 임시직 인원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2001년(66명) → 2002년(56명) → 2003년 6월(50명)

○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 방송의 정상적인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임시 고용인력을 정규직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辛基南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서는 외신 및 내신의 왜곡보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잘못된 비판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정부대변인으로서 정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하시면서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서는 촛불시위 등으로 인한 국내 반한감정 고조 시 홍보처의 역할과 국가이미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외홍보원의 조직개편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 초 미국 언론들의 집중적인 국내 촛불시위 보도로 미국 내 반한정서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미국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홍보가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처는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정책 공조와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유력언론 대통령 회견 및 특집 제작 지원 (PBS, NYT, TIME 등)
- 새 정부 정책소개 학술세미나 개최(존스홉킨스대, 5.1)
- NYT 등 대상 정책소개 및 한미동맹관계 부각 광고 게재(5.7~15)
- 한국문화 순회공연(워싱턴·뉴욕·시카고·슬레이트이크시티·샌프란시스코 5개 도시, 5.29~6.9) 등

○ 위기대응 해외홍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위원님의 고견은 향후 조직기능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서는 외국 교과서 오류내용 개선을 위한 우리 처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면서, 우리 처가 직접 외국 교과서 출판사를 대상으로

친선서한을 보내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국가이미지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국 교과서 기초조사 및 시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OECD가맹국 및 한국전 참전 16개국 등 총 56개국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수집: 2003.1월~
- 보고서 작성: 2003.6~10월
- 시정자료 개발: 2003.11~12월

○ 친선서한을 활용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유념, 작성된 교과서 시정자료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 각국 교과서 시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한국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사 대상 한국소개자료 보급과 교과서 편·저자 초청, 인터넷 오류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서는 미 CIA의 “World Factbook” 홈페이지상에는 아직 동해 및 독도를 포함한 한국관련 오류정보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점증하는 인터넷상 한국관련 오류에 대응하여 2000년부터 유력 인터넷사이트상의 오류들을 파악,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CIA에도 동해 및 한국관련 오류의 시정을 요청하는 해외홍보원장 명의의 이메일 서신을 발송하는 등 2000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CIA, 미국무부, 국방부, 미의회도서관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사이트를 대상으로 시정메일발송, 설명자료 제공 등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3. 위원님께서서는 언론의 취재 관련 공보관 사전면담, 취재원 실명제, 취재응대 사후 보고에 대한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보관 사전면담, 취재원 실명제 등은 문화관광부가 3월 14일 발표한 ‘문화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 문화관광부도 오해되고 있는 부분을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처가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한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의 취재 시 공보관을 사전에 경유할 필요가 없으며, 기자와 취재원 간 직접 접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사무공간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중 사전 약속 없이 사무실을 방문·취재하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취재원 실명제, 취재응대 후 사후보고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위원님께서서는 기자실 개방 진행상황 등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시면서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국정홍보처의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기자실 개방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3월 27일 정부의 기본방침을 발표한 후 관계부처, 언론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 광화문 중앙청사는 9월 1일 오픈을 목표로 설계업체를 공모했고, 7월 초에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8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천청사는 현재 재정부, 대전청사는 관세청 주관으로 구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과천청사가 공간확보 등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5. 위원님께서서는 대구U대회 입장권 판매율 제고 위해 초·중·고생 ‘U대회 현장학습’ 운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초·중·고생 U대회 현장학습 문제는 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행자부 등과 협의 중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후 운영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우리 처 홍보매체 등을 활용, 보다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6. 위원님께서 U대회를 대비한 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U대회 조직위는 동 대회기간 중 사스예방을 위해 6월 11일 180여개국의 대학 스포츠 연맹 회장 앞으로 자국 선수에 대한 사스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조직위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촌 내에 사스전문가를 배치하고 의료인 및 환자의 개인 보호구와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등 FISU·WHO, 정부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 대구U대회 참가 선수단 중 사스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스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진단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7. 위원님께서 U대회에 북한선수단 출전과 조총련 제일동포 응원단 참가에 대한 준비상황과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대구U대회 조직위 및 조총련체육회 등이 북한선수단 출전을 긍정적 방향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한 참가가 확정될 경우, 문광부·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U대회 참가 의의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 최근 정신문화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각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오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국가이미지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국 교과서 기초조사 및 시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OECD가맹국 및 한국전 참전 16개국 등 총 56개국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수집: 2003.1월~

- 보고서 작성: 2003.6~10월

- 시정자료 개발: 2003.11~12월

○ 작성된 교과서 시정자료를 토대로 각국 교과서 시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한국 관련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한국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사 대상 한국 소개자료 보급과 교과서 편·저자 초청, 인터넷 오류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李協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 개방형 브리핑제 관련 공무원과의 접근이 안 돼 취재가 불편하다는 언론에 나타난 출입기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지적하시면서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의 고견에 유념해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되더라도 언론의 취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자와 공무원의 접촉 문제는 사무공간 보호 측면에서 근무시간 중 사무실 방문을 삼가 달라는 것 이외에는 전화취재, 오찬, 만찬을 이용한 취재 등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자들의 취재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이 공보관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각 부처 공보관들이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인 관계로 각 부처 소관 정책업무에는 정통한 반면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우리 처도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 아래 브리핑을 주로 담당할 공보관 등을 대상으로 특강 및 전문교육 실시, 브리핑 매뉴얼 보급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 위원님께서 각 부처 브리핑 담당자가 누

구인지 물으시면서 그들에 대한 홍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답 변)

○ 각 부처의 브리핑 담당자는 공보관 외에 장·차관 또는 실·국장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아직까지 공보관이 부처 업무전반을 꿰고 책임 있게 브리핑할 위치에 있지 않는 만큼, 우선은 장·차관부터 솔선수범해 주1회 이상 정례브리핑에 나서고, 공보관을 비롯해 현안업무와 관련된 실·국장 등 간부진이 수시로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처에서는 현재 각 부처 간부진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의 의의와 요령 등을 알리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브리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등 브리핑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위원님께서서는 광화문 중앙청사의 브리핑룸 오픈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부의 무계획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광화문 중앙청사의 브리핑룸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우리 처는 브리핑룸 등을 무리하게 서두르기 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3월 27일 기본방향 설정 후 관계부처, 출입기자단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외국의 브리핑제도를 현지 시찰한 결과까지 포함해 5월 27일 기자실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시공업체 공개 공모를 거쳐 적격업체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7월 중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한 후, 예정대로 9월 1일 공식 오픈 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

5. 위원님께서서는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등의 결과 기자실 취재관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광화문청사나 과천청사 등에서 개방형 브리핑실 공사 등이 끝나지 않아 취재관행 변화 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취재관행의 변화는 새로운 기자실 제도를

어느 정도 시행해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서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6. 위원님께서서는 우리 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실적보다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마치 지금까지는 홍보를 제대로 못 했지만 향후 제대로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국정전반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원리 등 비전과 과제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 대통령 방미, 참여정부 출범 100일계기 등을 활용,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 지난달(5.27) 우리 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홍보현황을 부각하기보다 앞으로 해나갈 것 위주로 보고드린다는 의미에서 계획위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7. 위원님께서서는 국정방향에 대한 홍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언론과의 여건이 좋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홍보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참여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원리 등을 적극 홍보해 왔으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담은 홍보책자(“평화·번영·도약” 등)를 제작·배포한 바 있으며,

- KTV·국정뉴스·야호 코리아 등의 정부보유매체를 적극 활용, 새 정부 국정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어려운 홍보여건 불구, 우리 처는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개발·활용해 홍보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8. 위원님께서서는 참여정부 100일 동안 대북송금특검법 등 각종 이슈와 대통령의 방미·방일 성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각종 현안들에 대한 홍보처의 활동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에서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출범 초기임을 감안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에 대한 국민공감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 그리고 평화와 번영’ 등 국정논리시리즈 발간 추진(7중, 6~7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등 홍보간행물 제작·배포 △‘희망의 대한민국’ 등 TV·전광판·와이드칼라 등을 통한 캠페인 추진 △KTV, 주간 ‘국정뉴스’, 월간 ‘야호 코리아’ 특집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시계열 파악, 향후 국정에 반영(Feed Back) 시켜나가기 위한 국정이미지 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국정홍보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9. 위원님께서서는 여론수렴과 관련 업무보고에는 6월 현재 총 9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6회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대통령 관련을 빼면 과연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에서는 6월 17일 현재 ‘2010평창동계올림픽’, ‘대통령 취임식’, ‘수도권 대기오염’, ‘대통령 방미 前’, ‘대통령 TV 토론’, ‘대통령 방미 後’, ‘호국보훈’, ‘공무원 직무만족도’, ‘국정운영지표’ 등 9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6월 중 조사계획: ‘경제현안 여론조사 실시 (6.18~6.26)

○ 우리 처에서는 2003년도 여론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참여정부 국정이미지조사 △주요계기 홍보조사 △주요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기획조사 △각 부처 요청 주요정책 ‘여론조사’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10. 위원님께서서는 참여정부 100일 동안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홍보활동이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목표·국정원리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평화·번영·도약”, “요즘 많이 궁금하시죠”, “함께 생각해 봅시다” 등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확산

- ‘참여, 그리고 평화와 번영’(총괄편, 6.12 발간)을 비롯, 정치·경제·사회·통일·노동·교육 등 각 분야별 정책 논리집 시리즈 발간(7월 말까지)·배포

- 상시적 홍보활동으로 ‘야호 코리아’, ‘KTV’, ‘국정뉴스’ 등 정부보유매체를 활용, 정부 각 부처의 정책홍보 등

○ 이와 함께, 대통령 방미 전후 여론조사 등 각종 여론조사와 국정모니터 사업구축 등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 향후 위원님 말씀을 유념, 국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11. 위원님께서서는 홍보처가 언론과의 긴장관계 유지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등한시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정부와 언론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대언론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국정홍보처의 본연의 업무는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12. 위원님께서서는 정부 업무혁신과 관련 홍보처의 전담조직 운영여부, 자체 업무혁신 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자체 업무혁신팀을 구성(3.26~)·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 혁신안 개발 및 추진과제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팀장 홍보기획국장 등 총 8명)

○ 위원님께서 상임위 업무보고 시(6.17) 지적하신 우리 처 업무혁신 실적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았던 사유는 업무혁신과제에 대한 구체 혁신방향을 마련 중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6월 25일 현재 우리 처 인터넷 홈페이지 ‘업무혁신’ 코너를 통해 국정모니터 운영체제 전면 개편 등 자체 업무혁신 추진실적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유념, 자체 업무혁신안의 지속 개발과 함께 타 부처의 업무혁신사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13. 위원님께서서는 월드컵 1주년이 지난 지금 국가이미지 제고 활동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하시면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발한 이후 단지 두 차례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위원 교체 등으로 인해 회의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처는 위원회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제3차 회의는 총리실에서 개최(7월 초 예정)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3차 실무위원회는 기 개최(2003. 5.14)한 바 있습니다.

○ 제3차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 2003년 추진사업 현황 점검 △각 부처별 2004년 추진사업 확인 △위원회 주관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동 내용은 곧 개최될 제3차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14. 위원님께서서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해서 홍보처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작년 7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구성 후, 제2차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10.31)에서 △위원회 주관 8개 사업 △ 20개 부처 42개 사업을 국가이미지제고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제3차 국가이미지위원회는 총리실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를 추진 중에 있고, 국정홍보처장이 위원장인 제3차 국가이미지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이미지 제

고 평가지표 개발 △국가이미지 상징물 선정 △실무 T/F 구성운영 문제 등 입니다.

○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 위원회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鄭東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서는 국정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런 방향에서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우리 처는 그동안 내·외신을 막론하고 언론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왜곡보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의 국정성과에 대한 왜곡, 폄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의 정책이 정확히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2. 위원님께서서는 통합청사의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이 시급함과 주무부처로서 국정홍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 우리 처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현재의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화문 중앙청사는 우리 처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출입기자단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5월 27일 기자실 개선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9월 1일 오픈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과천청사는 공간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 상대적으로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으나 곧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우리 처도 적극 지원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서는 국정모니터 제도가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성

과도 없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업무방기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에서는 올해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반영도를 높이고자 국정모니터 사업방향을 새롭게 정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의 경우 참여 면에 있어서는 활발하였음에도 그 제시의견이 너무 일반적이고 교통·주택문제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결과의 효용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 처에서는 국정모니터 제도의 전문성·효과성·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편(안)을 마련하여 연초부터 추진하였고,
- 현재 분야별 전문가 모니터 모집이 완성 단계에 있으며 6월 중 그 첫 성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鄭鎮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질의요지)

1. 위원님께서서는 최근 정신문화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각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오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처는 ‘국가이미지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국 교과서 기초조사 및 시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OECD가맹국 및 한국전 참전 16개국 등 총 56개국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수집: 2003.1월~
- 보고서 작성: 2003.6~10월
- 시정자료 개발: 2003.11~12월

○ 작성된 교과서 시정자료를 토대로 각국 교과서 시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한국 관련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한국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사 대상 한국 소개자료 보급과 교과서 편·저자 초청, 인터넷 오류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